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

200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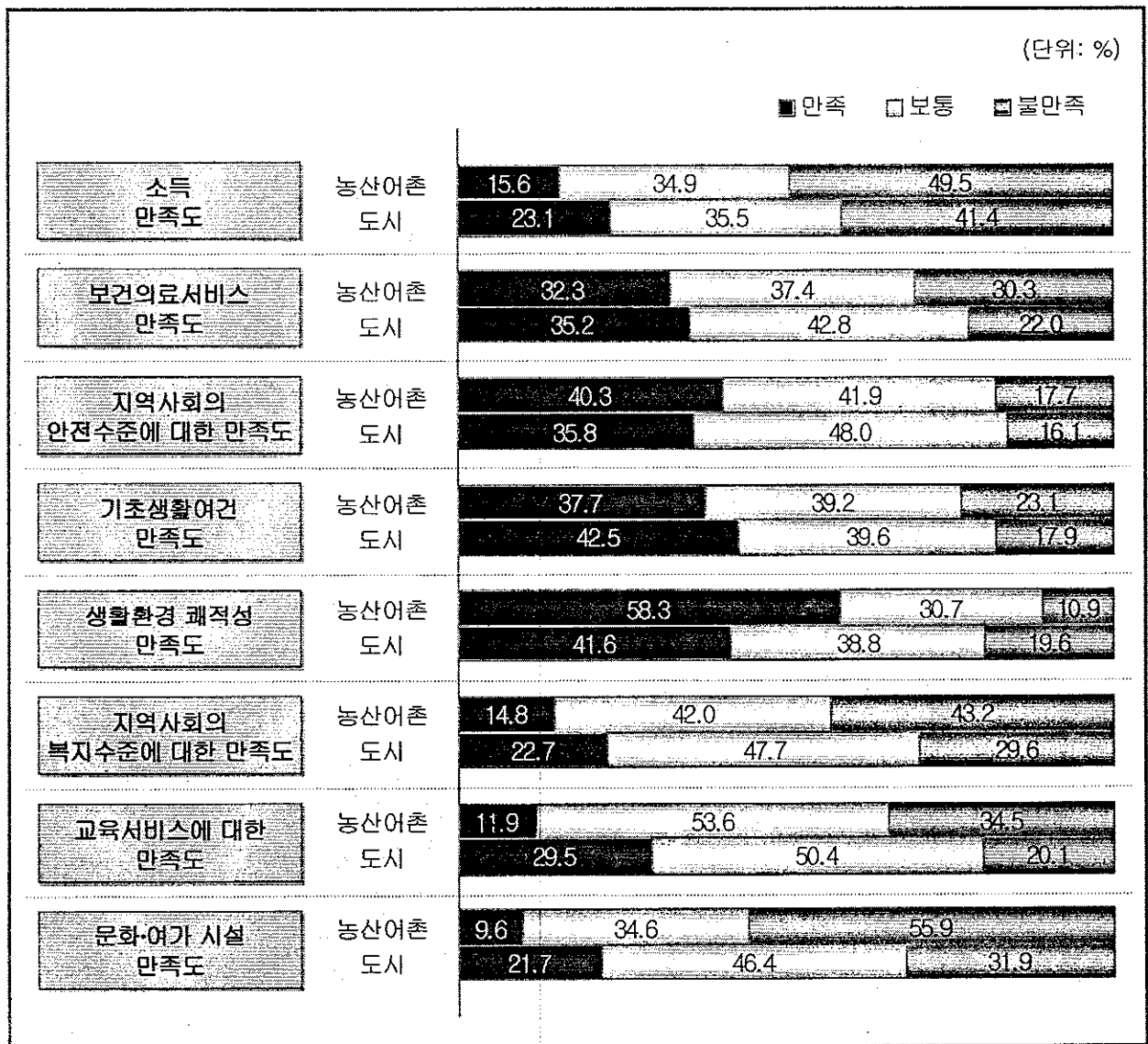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 립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여 성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목 차

I.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수립배경	1
1. 농산어촌의 현황	1
2. 농산어촌의 삶의질 실태조사 결과	2
3. 그간 농산어촌 정책의 평가	3
II.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4
1. 기본대책으로서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3년 농업·농촌 모습	4
2.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삶의질향상 기본계획』의 관계	5
2.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기본계획』의 장기비전과 추진전략	6
III. 기본계획의 부문별 주요 내용	7
1. 복지기반 확충	8
2. 교육여건 개선	21
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29
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42
IV. 기본계획의 실행과 관리	54
1. 계획의 추진체계	54
2. 계획의 평가체계	55
V. 투융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6
< 참고1 > 제1차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주요지표 변화	59
< 참고2 >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60

2. “농산어촌의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

- (주)미디어리서치는 '04.8~11월중 표본 5,000가구(농산어촌 3,500, 도시 1,500)를 대상으로 농산어촌의 삶의질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 농산어촌의 생활환경 쾌적성과 지역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보다 높았으나,
 - 농산어촌은 ①문화·여가시설(9.6%), ②교육(11.9%), ③복지(14.8%), ④소득(15.6%)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았음



I.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배경

1. 농산어촌의 현황

농산어촌 인구 :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 농어촌 인구는 '90년 1,110만명에서 '00년 938만명으로 15.6% 감소하였고 인구 3천명 이하인 면도 '90년 152개에서 '00년 447개로 크게 증가
 - 농어가 인구 비중 : (90) 16.7% → (00) 9.2% → (04) 7.5%
 - 농어촌 인구 비중 : (90) 25.6% → (00) 20.0%
- 농어가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
 - 만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율(04) : 농어가 28.6% > 도시 6.7%

복지·교육 여건 : 의료기관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

-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도시에 집중되는 등 의료·복지 인프라 부족
 - * 도시 집중도 : 종합병원(93.6%), 병상수(89.5%), 의료인력(88%)
- 1,420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500여개 (35%수준)
-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복식수업, 비전공 교사 수업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
 -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04) : 2,420개교 (전체 학교 5,149개의 47%)

기초 생활여건 : 도시에 비해 기초생활여건이 크게 취약

-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 크게 취약
 - 도로 포장율(03) : 농산어촌 51.5% < 도시 89.5%
 - 상수도 보급률(03) : 농산어촌 52.9% < 도시 98.0%
 -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00) : 농산어촌 20.4% > 도시 4.6%

3. 그간 농산어촌 정책의 평가

◇ UR이후 89조원의 투융자를 주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에 따라 농어업생산·유통기반이 대폭 확충되었으나

○ 복지·교육·지역개발 등 농어촌의 생활인프라는 정책적 관심부족과 부처간 농촌지원시책의 조정미흡으로 아직 취약

* 지방비와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 69조원중 대부분을 농업경쟁력 강화에 투자하고, 8.9%인 6.1조원을 생활여건 및 복지에 투자

□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으로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이 대폭 확충되고 농업내부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진전

○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도매시장,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 확충 등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기반을 마련

* 벼농사 기계화율 (92)84% → (03)99% / 현대화 온실 (92)45ha → (03) 8,983ha

* 미곡종합처리장 (92)2개소 → (03)328개소 / 도매시장 (92)6개소 → (03)30개소

○ 영농규모화 등 농업내부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진전

* 3ha이상 농가 : (92) 52천호, 3% → (03) 83천호, 6.5%

□ 그러나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추진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조정이 결여되었고

○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농산어촌관련 정책은 농산어촌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평균적인 지원에 머무름

⇒ 농가소득의 정체와 교육·의료 등 열악한 정주여건이 인구 감소를 유발하고, 인구감소는 정주여건을 더욱 악화

II.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1. 기본대책으로서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3년 농업·농촌 모습

- ◇ '04.2월 농업·농촌종합대책은 변화하는 농정여건에 대응하여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농업·소득·농촌문제를 분리하여 접근
- 농업 :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소득 : 직불제 등 시장친화적 소득안정장치 강화 및 농외소득원 확충
 - 농촌 : 복지·교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개발을 통한 복합적 정주공간화

농업 : 전업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개편

- 경쟁력 있는 전업농 20만호를 육성
 - 쌀전업농/생산비중 : (02) 41천호/22% → (13) 70천호/50%
 - 농가인구 비중 : (02) 7.5% → (09) 4.6% → (13) 3.4%
- 쌀 중심의 농업구조가 축산·원예 등으로 다양화
 - 농업GDP대비 쌀 비중 : (02) 33% → (09) 29% → (13) 25%

소득 :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1인당 소득수준 실현

- 농가소득 : (02) 2,447만원 → (09) 3,775만원 → (13) 4,268만원
 - 1인당 도·농간 소득 비교 : (02) 90% → (09) 104% → (13) 105%
- 농가소득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전환
 - 농가소득구조(농업소득/농외소득) : (02) 46% / 54% → (13) 33% / 67%

농촌 :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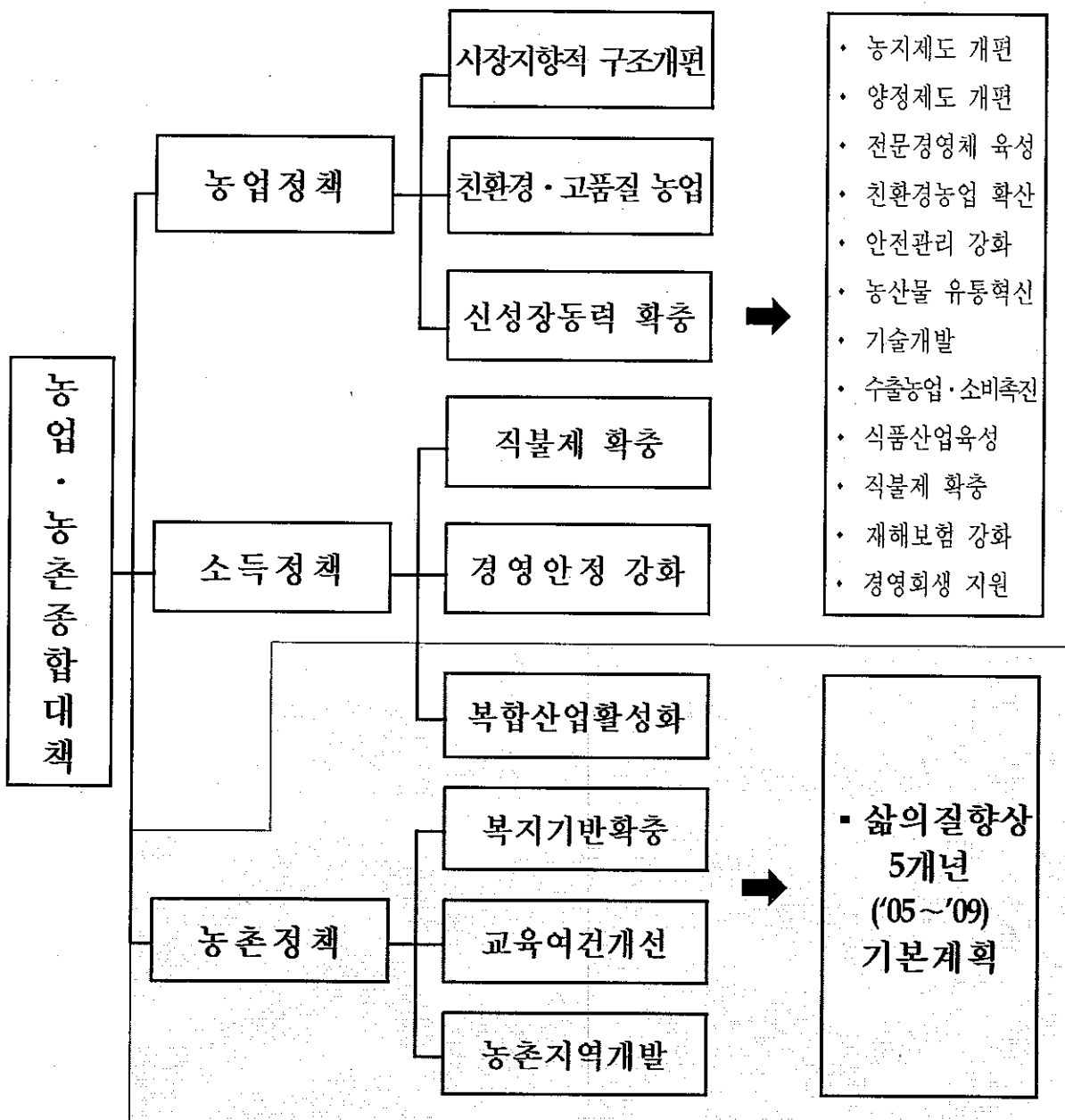
-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농촌 인구를 총인구의 20%수준으로 유지

2.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질향상 기본계획」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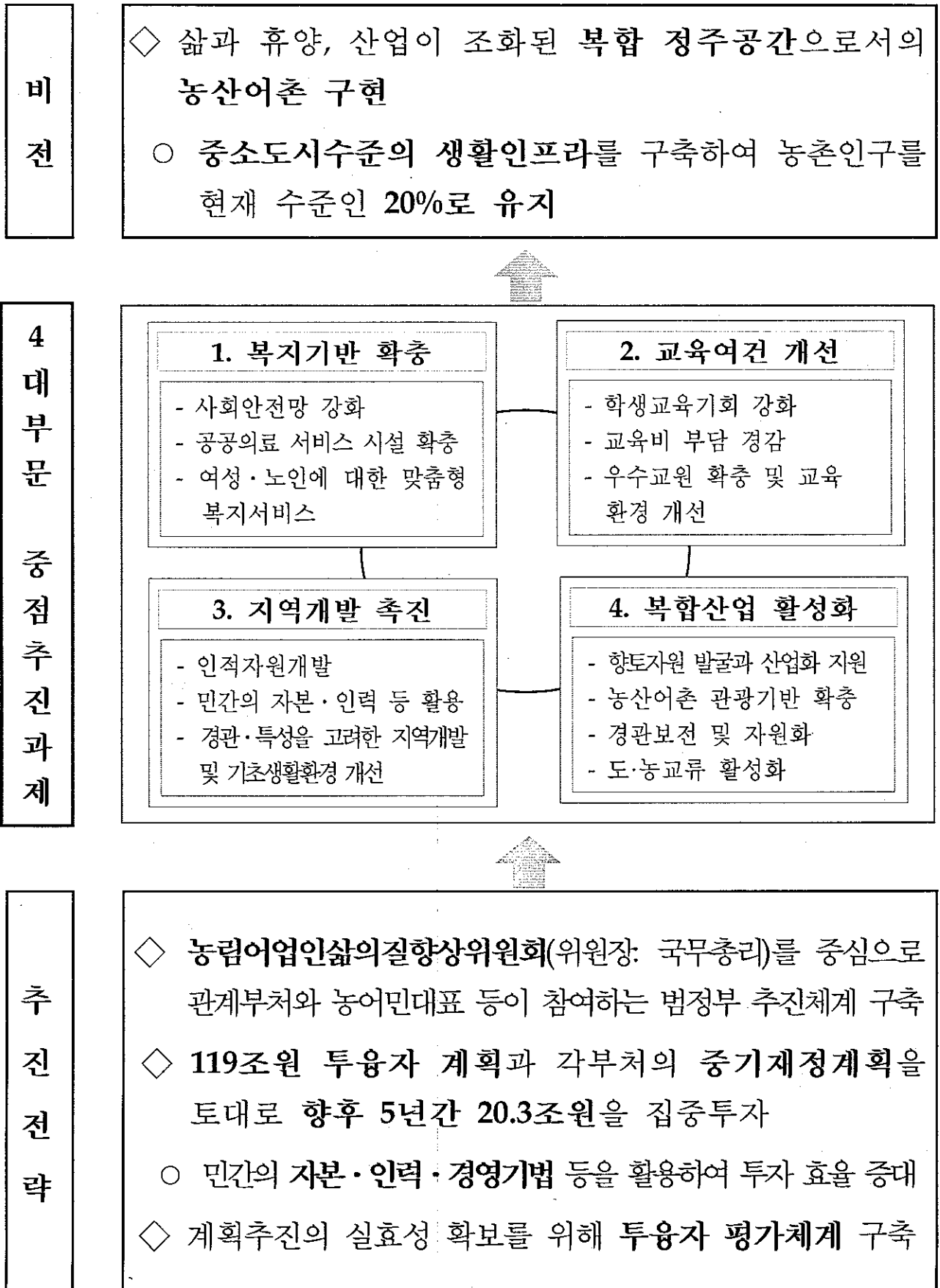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업·농촌 종합대책」 중 농촌부문대책을 구체화

○ 농산어촌 삶의질에 관한 실태조사와 그간의 농산어촌 정책의 평가를 토대로 복지·교육·지역개발·복합산업활성화 등 4대부문에서 농산어촌*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대책 수립

* 삶의질향상특별법상 농산어촌은 읍·면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임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장기비전과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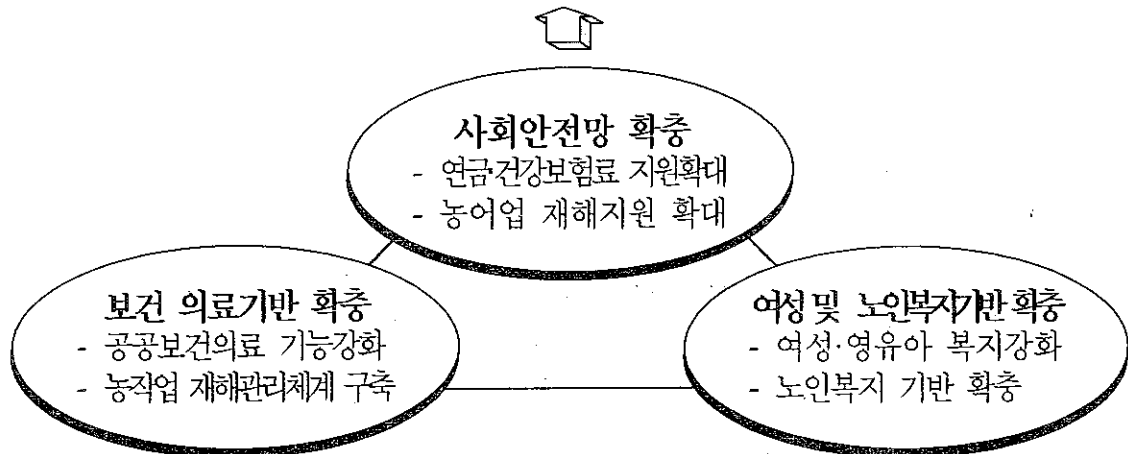
Ⅲ. 기본계획의 부문별 주요내용

《 기본 방 향 》

- ◇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농어촌대책들의 종합·체계적 추진으로 시너지효과를 제고
- ◇ 복지 지원의 지속적 확대로 영세·고령농 등의 탈농에 따른 기초생활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도모
 - 건강·연금보험료 지원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지원 확대 등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 ◇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중소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고, 농어촌을 미래형 복합생활 공간으로 조성
 -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국공립보육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도로·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보완 추진
 - 각종 시설들의 복합 단지화 및 시설간 연계 운영 등 촉진
 - 읍·면 등 중심지와 인구유지, 소득창출이 가능한 배후마을들을 연계하여 종합개발 추진
- ◇ 향토산업 육성, 농어촌관광기반 확충 및 농공단지 확대 설치로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보완 장치 마련

1. 복지기반 확충

농림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 로드 맵 〉

	1단계 (2005)	2단계 (2006~2008)	3단계 (2009)
사회안전망 확충	○건강보험료 경감율 : 40% ○연금보험료 지원등급 : 12등급	○50%로 확대 ○15등급	○18등급
보건·의료 기반확충	○보건소(지소)신증축 : 1,459개소 ○안전영농구역 조성 ○건강관리실 설치 : 992개소	○2,047개소 ○110개소 ○1,362개소	○2,243개소 ○165개소 ○1,436개소
여성 및 노인복지기반 확충	○보육시설 확충 : 332개소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 34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 : 74개소	○622개소 ○163개소 ○152개소	○722개소 ○163개소 ○202개소

※ 사업량은 누계기준임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전국적인 기준에 의한 사회
안전망 제도 운영은 도·농간 복지 격차를 좁히는데 한계

○ 도시 근로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에 의해 일정수준
보호받고 있으나

- 농어민은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고용,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건강, 연금보험료도 농어민이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간의 월 평균 보건의료비 >

	농산어촌	도시
월 평균 보건의료비	113천원(농가)	88천원(도시 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액 중 보건의료비 비중(농가)	7.4%	4.6%

* 농가경제통계(2003), 도시가계연보(2003)

○ 농기계 사용등 농작업 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입율(35%)이 낮고, 보상수준도 미흡

- 보상수준 : 사망 10백만원, 입원·치료비 3백만원

* 농업재해율 7.8%, 전체 산업 재해율 0.8%

○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소득평가 및 재산소득 환산액 산정, 부양
의무자 기준 등 농산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평가액 산정시 생산수단인 농지와 농
기계 등 동산에 대한 감액을 하고 있으나 500만원에 불과('04.6.5부터)

□ 공공의료시설 등 기초보건·의료 인프라 부족, 농림어업관련 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미 구축

- 농산어촌인구는 전체인구의 20% 수준이나 의료인프라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어서 접근성도 떨어짐
 - 도시 집중도 : 종합병원(93.6%), 병상수(89.5%), 의료인력(87.7%) 등

- 농산어촌지역의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장비가 낙후되고 응급의료 인프라가 미흡하며 의료의 질도 낮음
 - 보건지소의 시설 장비가 낙후(·현대화율 38%)
 - 전국 88개군중 지역응급의료이 취약한 군이 28개군

*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03.12) : 3,416(보건소 146, 보건지소 1,271, 보건진료소 1,899)

- 노령화, 농작업 여건 변화로 인한 작업부담과 유해작업 환경 증가로 농림어업인의 만성질환 및 안전사고 발생 증가
 - 만성질환 유병율 : 농산어촌 26.3%, 도시 19.6%

* 유병률 : 지난 2주일동안 질병의 발생시기를 불문하고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비율

< 도·농간의 의료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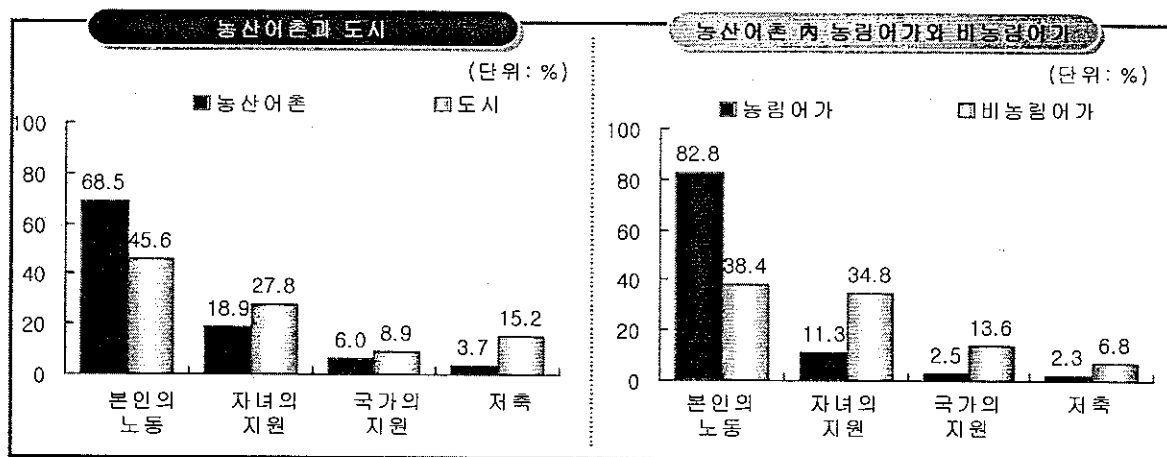
(2003. 12월 기준)

구 분		전국(A)	농산어촌 지역	
			현황(B)	점유도(B/A)
의료기관 (개소)	종합병원	283	18	6.4%
	병 원	944	174	18.4%
	의 원	41,693	3,819	9.2%
	총 계	42,920	4,011	9.3%
병 상 수		295,823	34,109	11.5%
의료인력 (명)	의 사	62,915	6,950	11.0%
	간 호 사	99,609	13,112	13.2%
응급의료 (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3	3	3.2%
	지역응급의료기관	310	80	25.8%

□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증가
등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지원 정책이 필요

- 농산어촌의 노인인구 비율이 도시에 비하여 매우 높음
 - 65세 이상 노인인구('04) : 도시(6.7%), 농어촌(15.6%), 농어가(28.6%)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 고령화 지역이 88개
군 지역 중 30개 군(33.7%)
-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농림어가 노인들의 주 소득원이 본인의
노동으로 나타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 농가 인구중 여성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농업인 지원대책 필요
 - 농가인구 중 여성 비중 : ('70) 50.3% → ('90) 50.8% → ('04) 51.6%
 - 실태조사결과 창업지원을 희망하는 여성이 조사인원의 29.7%로 나타남

<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존 소득원 >



*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농림부, '04. 11)

나. 주요 추진과제

1-1.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 연금·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농작업 재해지원 확대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개선

(1)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특별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
 - 건강 보험료 경감 지원율 : ('04) 30% → ('06) 50%
 - 가구당 년 간 평균 경감액 : ('04) 210천원 → ('06) 404천원
- 농림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 건강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액 평가시 휴·폐경 농지, 빈 축사 등에 대한 감액기준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 농업용 트랙터도 보험료 부과기준 완화
- 체납 보험료 경감 등으로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무소득 농업인에게 적용하는 결손처분 재산금액(현행 3백만원) 단계적 확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경감방안 검토

(2)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을 현행 12등급에서 18등급으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
 - 지원 표준소득 월액 등급 : ('04) 12등급 → ('09) 18등급
 - 1인당 연간 보험료 지원액 : ('04) 99천원~152천원 → ('09) 119~394천원

* 지원인원 ('04년 기준) : 280천명

(3) 농어업 재해보상 지원 강화

-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가입하는 농협 안전공제의 보상 수준 및 가입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장해 공제금보다 낮은 사망 공제금을 장해공제금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
 - 사망공제금 : ('04) 10백만원 → ('90) 60백만원
 - 1급 장해 공제금 : ('04) 25백만원 → ('09) 60백만원
 - 농업인들의 농협 안전공제 가입률을 50% 수준으로 제고하여 재해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들을 확대
 - 농업인 가입율 : ('04) 35% → ('09) 50%
 - * 농작업 안전공제 가입비의 50% 국고보조
- '04년부터 시행된 연근해 어선원의 재해 발생시 보상을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제도의 가입율을 제고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
 - 홍보 강화를 통해 보험제도의 조기정착 및 가입율 제고 추진
 - 당연가입대상 어선원(55천명)의 보험 가입율 : ('04) 65% → ('09) 80%
 -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을 상향 조정 추진
 - * 10톤 미만 영세어선의 경우 보험료의 50% 정부지원, 50% 선주 부담

(4) 농림어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검토

-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가 경제여건 악화 등 농림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소득 및 재산평가 방법 등 종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

1-2. 농산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보건소 등 시설·장비보강, 응급 의료기관·공공병원 확충 및 농작업재해안전관리 기능 확대

(1) 공공 보건 및 의료기반 확충

○ 농산어촌의 취약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28개군 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추가지정 및 응급전담인력, 시설, 장비보강 등 추진
- 취약지 지역응급 의료센터 추가지정, 응급시설 및 운영비 지원 등

○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기능보강 및 서비스 확충

- 보건소, 보건지소의 노후 의료장비를 대폭 개선하고, 의료체계, 이용상황 및 노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 등 신·증축 추진
- 561개소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장비 등 지원
- 노후보건소, 보건지소 등 신·개축 : ('04) 1,170개소 → ('09) 2,243개소

* 농산어촌의 공공보건기관: 3,316개소(보건소 146, 보건지소 1,271, 보건진료소 1,899)

○ 지방공사 의료원의 시설·장비보강 및 서비스 기능강화

- 농산어촌 지역 지방의료원(24개소)의 시설 및 장비를 보강, 야간 진료, 응급의료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산어촌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교육·훈련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 방문보건사업 등 지침 개발 및 교육 실시, 현장지도 및 감독 강화 등

-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지원 및 경영개선지도
 - 민간의료기관의 노후의료시설 개보수 및 의료기기 현대화
 -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한 병원경영 개선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지원

(2) 농산어촌 마을 건강관리실 운영 내실화

- 여성화·고령화되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피로회복 시설이 없는 마을 위주로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
 - 신규 설치는 운영비 자체조달 등 운영활성화가 가능한 마을 위주로 추진
 - ('04) 884개소 → ('09) 1,436개소 (552개소 신규 설치)
- * 건강관리실 시설 : 피로회복 및 체력단련기구, 찜질방, 건강측정기구 등
- 운영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실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기존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보강이나 리모델링 지원 및 건강, 운동 프로그램 보급 지원 추진

(3)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농작업 재해 원인 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방안 개발
 - 유해가스, 농약, 근골격계 위험요인 등 농작업 유해 작업환경 평가 및 안전 관리기준 설정
 - 농작업 보호 및 안전보조 장비 개발 : ('04) 18종 → ('09) 50종
- * 농기계 사고율 : ('01) 7.7% → ('09) 3%, 농약 중독율 : ('01) 7.1% → ('09) 3%

○ 농진청(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기능 보강

-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05 이후)
- 농작업재해 통계생산 및 농작업 재해 예방·감시·관리 실시
- 인트라넷을 통한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운영 및 원격진료 상담
- * ('06) 5개소 → ('09) 83개소(2개 시·군당 1개소)
- 농작업 재해관리정보제공을 위한 교육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4) 안전영농구역(Safe Farm Zone)조성 등 안전영농 환경 조성

- '05년에 농업인, 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작업팀을 구성하여 안전영농마을 조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06년부터 시범 실시
- '06년에 20개소를 시범 조성하고, '09년까지 165개 마을 조성
-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 교육 지원
- 전문인력 양성(시군당 1명) 및 농업인 교육 : ('06) 5백명 → ('09) 20백명

＜ 안전영농구역 ＞

- ◇ 시설재배, 과수, 축산 등 농업주산단지를 대상으로 각종 농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범마을 지정
- 관련 공무원, 보건·의료 전문가, 농작업장비 제작자, 농업인 등으로 안전영농마을 추진 협의회 구성
- 농작업 보조장비, 작업환경개선 및 안전교육 지원 등
- 과수, 채소등의 주산지별로 발생하는 주요 농작업 관련 재해를 파악하고, 예방 및 관리방안을 마련·적용
- * 미국, 캐나다 등도 Safety Zone을 지정하여 위험한 농작업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1-3. 농산어촌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 강화

◇ 농산어촌 여성,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
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따른 창업지원 확대

(1) 농산어촌 보육시설 설치 확충 및 만5세아 무상 보육 조기 실시

- 전국 1,420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설치
 - 농산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 ('04) 222개소 → ('09) 722개소
 - * 농산어촌 보육시설은 4,054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25,319개소의 16.0%
- 산재된 농림어가 및 농림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보육, 전일제, 휴일운영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도입 추진
- '06년부터 농어촌지역 만5세 아동에 대해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

(2)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05년부터 영유아가 있는 2.0ha 미만 농림어업인까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영유아가 있는 모든 농림어업인에게 양육비 지원 추진
 - 지원범위 : ('04) 1.5ha미만, 25천명 → ('05) 2.0ha미만, 31천명
 - 지원금액 : ('04) 1,224천원/년(월 102천원) → ('05) 1,440천원/년(월120천원)

(3)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 여성농어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 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
-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시급한 복지수요 충족
 - 여성농어업인센터 : ('04) 27개소 → ('09) 163개소 (시·군당 1개소)
- 여성농어업인센터에 교양강좌,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배움, 모임, 나눔의 장으로 육성

(4) 농어가도우미 지원 확대

- 여성농어업인 출산시 영농을 대행해 주는 농어가도우미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인상

* 지원기간 및 지원단가('05) : 30일(30천원/일)

- 사고, 질병, 교육 등의 경우에도 영농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
 -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전문교육 등에 의해 영농애로를 겪는 농어업인이 신청할 경우 영농인력을 지원

(5) 농산어촌 여성, 소외농가 이동 봉사단 운영

- 농협, 농민단체 등을 통하여 도시 등 전국의 농산어촌봉사 희망인력 및 단체들을 연계·조직화, 고령 여성, 소외농가의 영농 및 가사 지원
 - '06년에 5개 봉사단을 조직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후 단계적 확대

(6)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창업지원 강화

- 상품성이 있고 판로확보가 가능한 농특산물 및 향토상품 등을 가공·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다양한 지원 실시
 - 수공예품, 전통·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생산·가공 시설 등을 지원
 - 1사1촌운동, 생산제품 박람회, 소비자 상품평가회 개최 등을 통해 판로 확대 지원

(7) 다양한 농산어촌 복지지원 시설의 연계·통합 운영

- 건강관리실, 여성 농어업인센터, 국·공립 보육시설 등 다양한 농산어촌 복지지원 시설을 연계 또는 통합 운영하여 복지지원의 실효성 제고
- 농협 등 민간에서 설치하는 복지시설과도 연계 운영 추진

1-4.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

◇ 농산어촌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 및
건강·장수마을 조성 등 노인복지 기반 확충

(1) 농산어촌 지역의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자율적인 복지지원 강화

○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율적인 노인보호체계 구축

- 건강한 노인과 여성 등을 노인봉사원으로 양성하여 지역내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하는 지역민 중심의 자율적인 노인보호지원체계 구축
- 보호체계는 마을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읍·면·시·군 단위로 확대 발전
- * '06년 40개마을 시범사업 추진 후 '09년까지 200개 마을로 확대
- 노인봉사원은 거동불편, 재가노인의 안부 등을 매일 확인하는 일반 봉사원과 목욕, 이·미용을 지원하는 전문봉사원으로 구분·양성
- * '06년 800명을 노인봉사원으로 양성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노인봉사원의 활동에 필요한 재가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지역공동체 중심의 노인보호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 중증 노인 보호를 위해 각종 노인보호시설 확충 추진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로 구성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지역 자체보호가 어려운 노인지원
-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 ('04) 18개소 → ('09까지) 202개소
- * '04년 현재 전국 152개소 중 농산어촌은 11.8%인 18개소에 불과
- 고령화 정도가 심화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10인 규모의 치매 노인센터 지원방안 마련 추진

(2)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복지기반 구축

○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고령친화농업모형 및 작목을 개발 보급

- 보람추구형, 여가활동형, 관광농업형 등 6종 이외의 고령친화농업 모형 및 작목 개발

○ 농산어촌 지역내에 건강·장수마을 조성

- 농산어촌 노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노인들의 전통기술 등을 통한 소득화 기반 조성

* 건강장수마을 조성 : ('05) 100개마을 → ('09) 800개마을

○ 고령노인, 도시 은퇴자 등을 위하여 도시근교 농산어촌에 복합 노인복지 시설 및 전원형 은퇴농장 등을 시범설치 후 단계적으로 확대

- '05년중 주거·의료·여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노인주거단지 4개소를 시범조성하고,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조성
- 노인들이 일과 여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전원마을 확대 추진

* ('04) 2개소 → ('09) 12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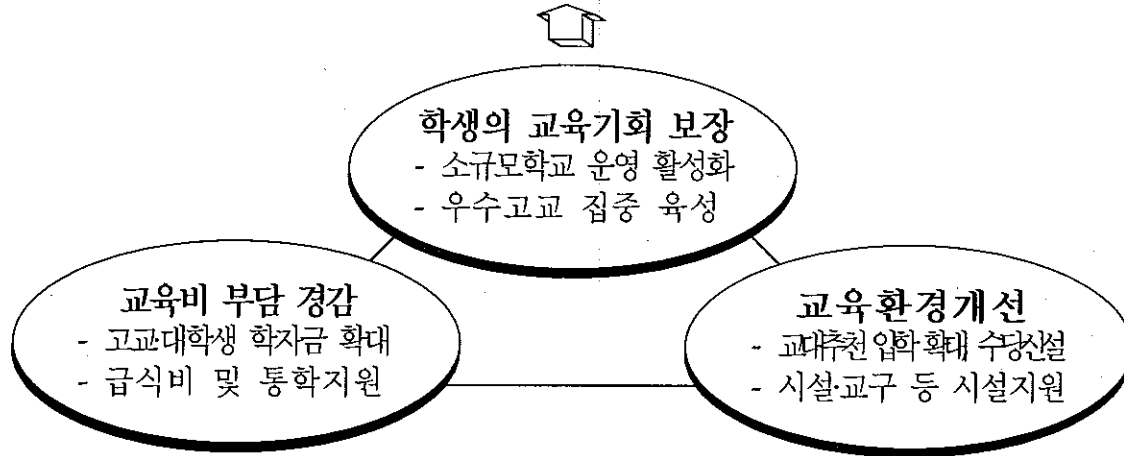
(3) 경영이양 직접지불의 지급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현재 농업인 보유 논을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하는 63~72세 농업인(소유규모 2ha까지)에게 지원

* 지원단가 : 매도시 연 2,896천원/ha(2~8년간 매월 분할 지급), 임대시 2,977천원/ha(1회 지급)

2.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에 거주 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로드 맵 >

	1단계(2005)	2단계(2006~2008)	3단계(2009)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 학교군 구성 : 6개군 ○ 작고아름다운학교육성 ○ 우수교육성 : 14개교 ○ 대학특별전형 : 3%	○ 66개 학교군 ○ 150개교 ○ 68개교 ○ 4%	○ 86개 학교군 ○ 200개교 ○ 88개교 ○ 4%
교육비 부담경감	○ 고교생 학자금 지원 107천명(1.5ha → 전농가) ○ 대학생 학자금 지원 : 35천명/연간	○ 381천명 ○ 48천명/연간	○ 458천명 ○ 48천명/연간
교육환경 개선	○ 교대산편입생 : 1,000명 ○ 도서관 지원 ○ 다목적실 지원	○ 3,100명 ○ 750개교 ○ 195개교	○ 3,800명 ○ 1,000개교 ○ 260개교

※ 사업량은 누계임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우수학생들이 도시로 전학

○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산어촌학교의 통폐합, 교원의 농산어촌학교 근무 기피 등으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계속 악화

* '02년 이후 농산어촌학생 47천명 감소, 도시학생 74천명 증가

□ 소규모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수업의 질 제고 곤란

○ 초등학교는 복식수업, 중등학교는 비전공자 수업 등으로 수업 부실 초래

- 9개도의 복식학급은 1,908개 학급(총 47,483 학급의 4.0% 수준)

○ 소규모 학교(학생수 100인 미만)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움

- 소규모학교('04) : 2,420개교(농산어촌학교 5,149개교의 47%)

□ 교육여건이 불리하여 도시 유학이 늘어남에 따라 농림어업인 가정의 교육비 부담 가중

○ 농림어가의 81.5%가 교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 도시는 학원비, 보충교육비 부담이 큰 반면, 농산어촌은 하숙·자취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유학생이 있는 가구비율 : 도시 6.2%, 농림어가 14.6%

· 가구당 월 교육비 부담액 : 도시 502천원, 농촌 444천원

* 농림부. '04.11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등 조사

□ 교원의 근무여건 열악으로 농산어촌학교 근무 기피

- 대다수 교원들의 도시지역 근무선호와 교대 졸업생들의 농산어촌 지역 임용시험 기피로 농산어촌지역 초등교원 부족현상 발생

- 교대 졸업생의 농산어촌지역 임용시험 기피현상 심화('04년 6개 도 미달)

- 초등 현직교원의 임용시험 응시자 중 대도시 희망자가 89% 차지('04년)

- * 초등교원 부족 현황('04) : 1,247명(소요인원 41천명의 3%)

- 농산어촌은 40대이상 교원 연령 비율이 높고 도시는 상대적으로 젊은 교원 비율이 높음

- * 연령별 교원비율(40대이상) : 도시 49.3%, 농산어촌 57.3%

- 농산어촌지역 근무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미약

- * 현재 도서벽지 수당(3~6만원/월) 및 승진가산점제도 시행

□ 농산어촌 지역사회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교수업 운영방법의 개발·보급이 미흡하며,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책 부족

-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소규모학교의 규모적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미흡

- 학생들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의욕 저하

- 농산어촌의 학원, 도서관, 박물관등 교육·문화시설 부족으로 학교 외의 학습기회 부족

나. 주요 추진과제

2-1.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 우수고교 집중 육성,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도시수준의 교육기회 제공

(1) 우수고교 집중 육성 및 대학특별전형 확대

- 학사운영의 자율성 부여 및 교육여건 개선 등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으로 고교단계에서 이촌향도 예방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04) 7개교 → ('09) 88개교
- 농산어촌지역의 정원 외 대입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하여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및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을 최소화
 - 농산어촌지역 고등학생 대입특별전형 비율 : ('04) 3% → ('06) 4%

(2)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 통학거리 내에 있는 인근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 교육과정 및 시설 공동 운영으로 소규모학교 교육 정상화
 - ('04) 6개 학교군 → ('09) 86개 학교군
-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으로 교육과정 상호 지원 운영 및 상치교사 해소
 - ('04) 100개교 → ('09) 132개교
-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독자적 운영이 바람직한 학교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09까지 200개교)
-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 ('04) 학년 당 7~10명 이하 → ('09) 학년 당 5명 이하, 2개 학년 10명 이하

(3) 농산어촌형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농산어촌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복식수업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학습 방법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도모
- 정규수업을 지원·보완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학습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09년까지 10개 과목 개발)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로 농산어촌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제고
- 문화·예술관련 강사풀제 활용 및 순회강사 확보, 교재·교구 등을 통한 방과 후 교육 활성화로 농산어촌 학생의 특기적성 교육기회 확대
- 먼 지역이하 초등학생의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위한 방학캠프 운영 지원

(4)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 강화

- 농산어촌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증설로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04) 3,369학급 → ('09) 3,919학급(550개 증원)
- 저소득층 만3·4세아 및 만5세아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만 5세아 무상교육 수혜인원 : ('04) 13천명 → ('09) 60천명
 - 만 3,4세아 무상교육 수혜인원 : ('04) 7천명 → ('09) 19천명
- 유치원의 경우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농산어촌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유아교육 및 보육여건을 개선

2-2.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 경감

◇ 고교생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농림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 확대

(1)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전 농어가로 확대

- 1.5ha미만 농어가로 한정하던 제한을 폐지
 - 지급대상 : ('04) 1.5ha (87천명) → ('05) 모든 농림어업인 (107천명)
 - 지원단가(인문계 기준) : ('04) 743천원 → ('05) 769천원

(2)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 '94년부터 시행중.
- 농림어업인 자녀인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은 보조 지원
 - * '04년부터 시행중

(3) 농산어촌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방안 검토

- '80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 급식비의 1/3 지원중
- 전국의 자영농·수산계과 고등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 지원단가('05) : 3,090원/일, 1인당 연간지원일수 260일

(4) 농산어촌 장애아 교육 지원

- 농산어촌지역의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90개소) 순회교육비 등 지원
 - 가정·일반학교 등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아 순회교육에 필요한 인력·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

2-3. 농산어촌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 교육감추천 입학제 확대, 복식·순회수당 신설 및 도서관확충, 정보화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 추진

(1) 농산어촌학교 교원 확보

-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를 확대(4개도 → 7개도)하여 농산어촌 초등교원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
 - 교육감이 추천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당해 지역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 교사 임용 후 일정기간 복무 의무화
 - *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생 장학금지원 확대 : ('04) 877명 → ('09) 3,800명
- 유능한 교장을 농산어촌 학교에 초빙하고 희망교원에 대하여는 농산어촌에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 내실화 도모

(2) 농산어촌학교 교원 우대

- 현재 도서벽지 교원에 한해 지원중인 도서·벽지 근무수당(월 3~6만원)과는 별도로 순회교사·복식수업 수당 신설
 - 2개이상 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교사에게 순회교사수당 지급
 - 2개이상 학년을 1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교사에게 복식수업수당 지급
- 도서·벽지 등 오지학교의 교직원 사택확충 및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우수교원 유인 및 방과후 학생 지도 강화

(3) 농산어촌학교 시설·설비·교구 등 지원

- 수준별 교과 운영과 재량학습 및 특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목적실**을 신축하여 특기적성교육 및 주민들의 여가활동, 교양, 관련기술 교육 등 평생교육센터로 활용(260개교)
- 소규모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집중 지원('06~'09 1,000개교)

(4) 교육정보화 지원

- PC 보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통신회선 고도화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 PC 1대당 사용학생을 5.8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인터넷 통신회선을 2Mbps로 교체
 - 농산어촌을 포함한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원활하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업 실시

(5)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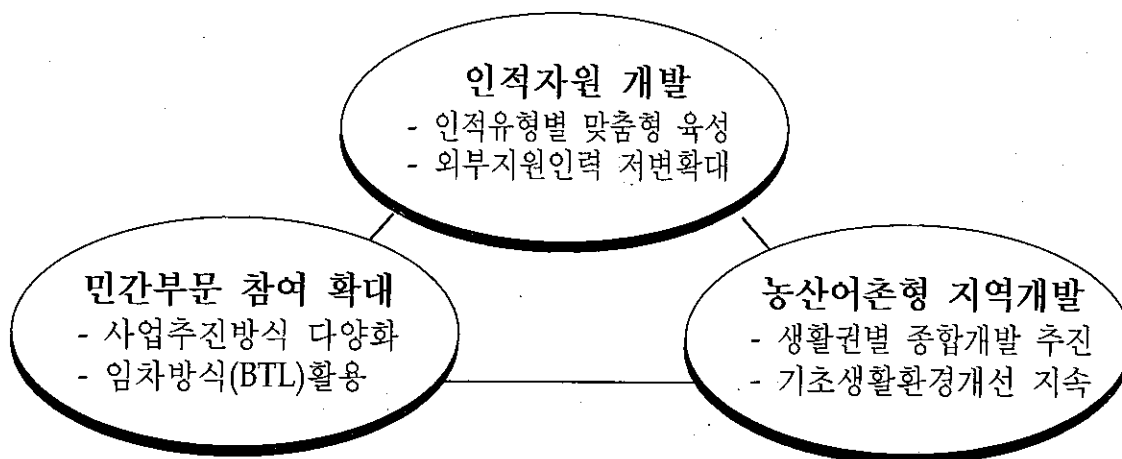
- 시·도교육감 소속 하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 평생교육 진흥 추진
 -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추진

(6) 농산어촌 주민들에 대한 취미·여가 활동 지원 강화

- 농산어촌지역에 시·군단위로 Community Center를 운영하여 농산어촌 주민 및 아동들의 취미·특기·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 시·군단위로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주민자치센터, 농협 등 각종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조정
 - 기존시설들을 활용하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 자원봉사자, 교사, 기타 전문가 등 우수강사인력 지원망 구축

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다원적 기능을 갖춘 자립형 정주공간 창출
 * 전체인구 대비 농산어촌 인구감소 폭 완화



〈 로드 맵 〉

	1단계(2005)	2단계(2006~2008)	3단계(2009)
인적자원 개발	○ 지역개발 전문인력 100명 육성 ○ 지역개발인력교육 협의체 구성	○ 2,000명 육성 ○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 마련·운영	○ 2,500명 육성 ○ 지역개발 新직업군 활성화
민간부문 참여 확대	○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모델(BTL등) 개발	○ 신규사업모델 시범 시행	○ 사업 확대
농산어촌형 지역개발	○ 생활권별 종합개발 - 농촌 : 36개 권역 - 어촌 : 152개 권역 - 산촌 : 123 권역 ○ 면지역 상수도 수혜 인구 2.1백만명	○ 생활권별 종합개발 - 농촌 : 176개 권역 - 어촌 : 178개 권역 - 산촌 : 170개 권역 ○ 수혜인구 3.2백만명	○ 생활권별 종합개발 - 농촌 : 276개 권역 - 어촌 : 187개 권역 - 산촌 : 188개 권역 ○ 수혜인구 3.5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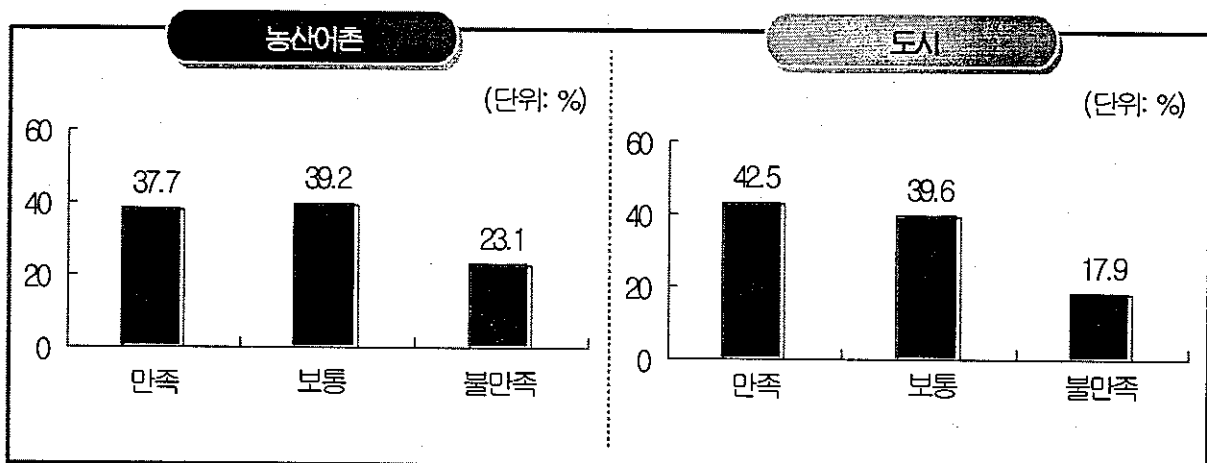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식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개발로 전환됨에 따라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인적자원육성 시급
 - 그 동안 지역개발 사업은 중앙부처가 주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택정비, 도로포장 등 SOC중심으로 추진
 - 최근 쾌적한 정주공간조성, 소득원 개발 등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상향식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주도할 지역의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 농산어촌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투자 중심의 농산어촌지역개발은 한계
 - 농산어촌 주민, 도시민 등의 지역개발사업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적극 유치 필요
 - 정부주도 사업은 다양한 주체의 욕구를 반영하여 차별화시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
- 대도시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 개발 필요성 증대
 -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소도읍, 면소재지 및 중심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의료·행정 등 기반시설 지원이 요구됨

□ '90년대부터 농산어촌 지역의 기초생활여건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

- 시·군도 이상 도로 포장율은 농산어촌이 51.1%로 도시(83.0%)보다 크게 낮은 수준
- 30년 이상된 노후주택도 579천동(20.4%)으로 농산어촌 주택의 신·개축 의사가 도시보다 훨씬 높음
- 농산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52.9%(읍 80.8%, 면 33.0%)이며 특히 면지역은 대부분 간이상수도나 자가 지하수에 의존
 - 광역시·일반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8%이상의 전국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0% 수준 임
-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으로 생활쓰레기, 폐영농자재, 외부유입쓰레기 등을 주로 자체 소각이나 매립에 의존함으로 인해 농산어촌환경 오염 심화

< 기초 생활 여건의 만족도 >



*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04.11)

나. 주요 추진과제

3-1. 인적자원 개발

◇ 지역에서 상향식 농산어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리더양성, 전문가집단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1) 농산어촌 활성화를 주도할 지역개발리더 양성

- 마을이장 등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 리더쉽 육성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역량배양
 - 지역발전의 비전 제시, 지역발전프로그램 기획, 지역경영 등 교육
- 마을주민, 공무원, 유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역량 등을 교육하여 초급수준의 지역리더 양산
 -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는 정책지원에 필요한 협치(governance), 지역개발관련제도의 전문성 향상 분야 교육 강조
- 지역개발분야 교육을 수료한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추진
 - 교육수료자에 대한 교육학점관리제를 실시하고 교육수료 내용 등을 기초로 단계별 인적자원역량을 구분·관리
- 여성의 지역개발역량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여성교육수료자 비율 확대
 - * 여성교육수료자 비율 : ('04) 8% → ('09) 30%
- 대학, 교육컨설팅업체,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인력 교육협의체를 구성
 - 교육 전문기관간 교육내용 조정 및 장기 인적자원개발 방안 협의

(2) 지역개발리더, 마을주민을 지원할 외부인력 저변 확대

- 지역개발분야별 전문가 풀 구축 및 농산어촌과 네트워크 구축
 - 농산어촌지역개발인재뱅크를 마련하여 지역개발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DB화하고 전문가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 지역별·분야별 전문가 등을 쉽게 찾아서 지역개발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검색 및 연계시스템 마련
-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지역개발에 대한 관심 및 참여제고
 -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contest' 개최, '고향 가꾸기 웹사이트' 운영 등
- 농산어촌 지역개발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은퇴자, 젊은 인력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지역개발 인턴제 추진

(3) 지역개발역량을 갖춘 마을 등에 지역개발사업 중점지원

- 사업별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적자원을 사업대상 선정시 의무 요건화
 - 사업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인적자원이 포함되도록 사업지침 등 수정
 -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 인적자원기준을 차별화하여 운영

(4) 지역개발관련 新직업군 창출 및 활성화

- 지역리더, 관련전문가, 출향인 등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의 인적자원을 총괄 대표하는 新직업군을 창출하여 인적자산화
 - 新직업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新직업군 전국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홈페이지 구축, 동호회 형성 등 지원
- 지역개발 CEO제도 등 지역개발 전문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직업군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

3-2.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민간분야 참여확대

◇ 민간의 자본, 인력, 경영기법 및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노하우 등을 적극 도입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수요 충족

(1)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 기존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가 주도하도록 개선
 - 기업체 · 지역주민 공동투자형, 도시민 · 지자체 공동투자형, 기업체 · 도시민 직접투자형 등 도입
- 공모방식 등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추진방식 확대

(2) 지역개발사업 메뉴의 확대 및 세분화

- 분야별로 단순화되고 소규모로 투자되는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규모 및 일정이 다양화된 사업메뉴 개발
 - 마을 · 소권역 · 면 · 군 · 도 단위 등 지역범위를 다양화
- 민간이 주도하는 농촌지역개발 벤처사업 모델 개발
 - 지역별특화산업화형, 부동산개발형, 바이오산업형, 농촌휴양형 등
-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은 사업메뉴를 다양화하여 기업체, 도시민, 지자체 등의 수요에 대응
 -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농산어촌경관 개발분야를 강조하여 사업세분화
 - 도시민 등의 농촌유입을 위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맞춤형 전원주거 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등으로 메뉴를 세분화

(3) 지역개발사업에 BTL방식(임차방식) 본격 추진

- 대규모 사업 또는 장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정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시설에 대한 임차방식(BTL) 추진
 - 노후하수관 정비, 공공임대주택, 체육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다양한 지역개발 관련 공공시설들에 적용 가능
 - 정부재정범위내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앞당겨 투자함으로써 기본수요를 조기 충족 가능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개정('05.1.1)에 따라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대폭 확대됨(35→44분야)
- BTL방식을 활용할 세부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방안은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시 구체화

<임차방식(BTL)사업 개요>

- ◇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자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최종사용자에게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자유치사업방식인 BTO (Build-Transfer-Operate)사업과 달리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함

3-3.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 생활권별(배후마을 - 면소재지 - 소도읍) 기능과 역할에
맞는 농산어촌 지역개발 추진

◇ 주거, 상·하수도, 교통, 문화시설 등 기초생활환경개선을
통한 농산어촌 주민의 편익 제고 추진

(1) 농산어촌의 계획적 개발시스템 구축

- 관계부처별로 시행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지역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
- 시·군 단위 지역혁신협의회와 연계하여 시·군 단위 지역개발
협의회를 구성·운영
 - 시장·군수, 지역혁신리더, 마을리더 등이 참여
- 농산어촌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농산어촌 공간정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중앙단위, 시·군단위 농산어촌 지역개발협의회와 공동 추진

(2) 농산어촌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체계적 개발 추진

□ 농산어촌 마을권역의 체계적인 개발 추진

- 지역 자원개발, 소득화사업, 경관 형성, 커뮤니티 형성 등 권역
특성 및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어메니티자원 권역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농촌마을종합개발 : ('04) - → ('09) 276개 권역

○ 산촌 유형별 개발모델을 정립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산촌종합개발 : ('04) 108개 권역 → ('09) 188개 권역

○ 생산·관광·문화가 공존하는 어촌건설을 목적으로 중심항·포구를 축으로 하는 「중심어촌계」를 선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어촌종합개발 : ('04) 134개 권역 → ('09) 187개 권역

□ 주요 읍·면을 농산어촌의 중심지로 육성

○ 주요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과 생활편익 및 소득 문화기반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

○ 주요 면소재지를 선정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농산어촌 배후 마을을 연계하는 중심지로 육성

- 면체육공원, 건강관리실, 종합복지회관, 소재지 정비 등

□ 낙후지역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현저하게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 시·군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효과 극대화를 도모

- 현재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에 대해서는 낙후정도에 따라 년 20~30억원 정도를 지원하여 신활력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낙후지역('04.9월) :전국 234개 자치단체중 70개 시·군

(3)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 농산어촌주택을 보다 쉽게 신·개축할 수 있도록 융자금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금리 인하 등 추진
 - 주택 신축비용의 1/2 수준까지 융자지원 확대(지원한도 30백만원)
 - 지원금리도 연리 3.9~5.5%에서 3%로 점진적으로 인하
 - 연간 5천동씩 빈집정비사업 추진 : ('04) 52천동 → ('09) 77천동
- 농가 특성과 전통을 살린 다양한 주거모델(환경친화형, 고풍자
편의형 등)을 개발, 주택 신·개축시 적용
 - 농가환경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거쳐 주거모델 시범사업 추진
 - 생태적 측면 : 자연환경과의 유기적 연계
 - 물리적 측면 : 에너지 및 자원 절약, 건전한 토지이용
 - 사회문화적 측면 : 전통주거공간 유지보전, 생활공간 편리성 도모
 - *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 ('05) 5개 마을 → ('09) 45개 마을

(4)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시설 확충

- 면단위 미급수 지역(500개면)을 대상으로 상수도 설치를 확대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확대
 -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확대 : ('03) 33% → ('09) 65%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농산어촌의 소규모 자연마을(50호 이하)에
암반관정을 개발,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
 - * '05~'09년까지 1,500개소를 개발하여 22만여명(면지역 가구당 인구 2.9명)에
대한 식수문제 해결 : ('04까지) 4,751개소 → ('09) 6,251개소

- 농산어촌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확대 : ('04) 102개소 → ('09) 394개소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농산어촌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수질환경 개선
 - 친환경 하천정비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생태계 복원 및 수변공간 정비
- 매립시설·재활용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군단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 광역폐기물처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83개군을 대상으로 종합처리장 설치 추진
- * 폐기물처리시설 수 : ('04) 109개소 → ('09) 140개소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및 마을 하수도 정비를 통해 농산어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
 - 마을하수도 연간 200개소 수준 정비('04년까지 : 6,459개소 완료)

(5) 농산어촌 도로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

- 농산어촌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정비** 지속 추진
 - 농어촌도로 정비 : ('04) 18,120km(포장율 : 29.4%) → ('09) 19,270km(31.2%)
- 전국 읍·면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구입자금 및 **대폐차비** 확대 지원 추진('04 : 1,800만원/대)
- 전국 1,570여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손실비용**을 지원하고, 선령 10년 이상된 노후 일반 여객선은 연차적으로 항로 특성에 맞는 **차도선형 여객선** 등으로 대체 추진
 - * 차도선형 여객선 : ('04) 2대 → ('09) 11대

(6) 면단위 소규모 기초생활환경 종합정비

-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
 -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 마을회관, 빈집정비, 소공원, 녹색담 조성 등 경관 정비
- * 사업대상 : 770개면(광역시 준농산어촌 15개 자치구 포함)
- 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낮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
- * 사업대상 : 399개 오지면

(7) 과학·문화·예술·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

- 농산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센터, 평생교육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41관을 건립
 - '05년에 공공도서관 17개소를 건립하고, '06년부터 '09년까지 매년 6개소씩 공공도서관 건립
- 농산어촌 지역의 폐가·폐교를 다양한 과학·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
 - 개소당 1~2억원 범위내에서 리노베이션 90%, 프로그램운영비 10% 지원
-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과학기술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의 과학체험을 위해 사이언스샵, 폐교를 활용한 테마과학관 등 설치
- 중심지역에 체육·문화·청소년 시설을 갖춘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와 간이 체육시설, 편익시설을 구비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 * 농어촌 체육문화센터 건립 : ('04) 2개소 → ('09) 12개소
-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 ('04) 154개소 → ('09) 1,154개소
- 산림자원의 영구보전·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박물관** 건립(9개소)
 - 산림박물관 : ('04) 2개소 → ('09) 11개소
-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활용하여 대규모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방문화원별(221개)로 서민층,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아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 문화원별 연간 2~5회, 각 회별 70~300명 초청 규모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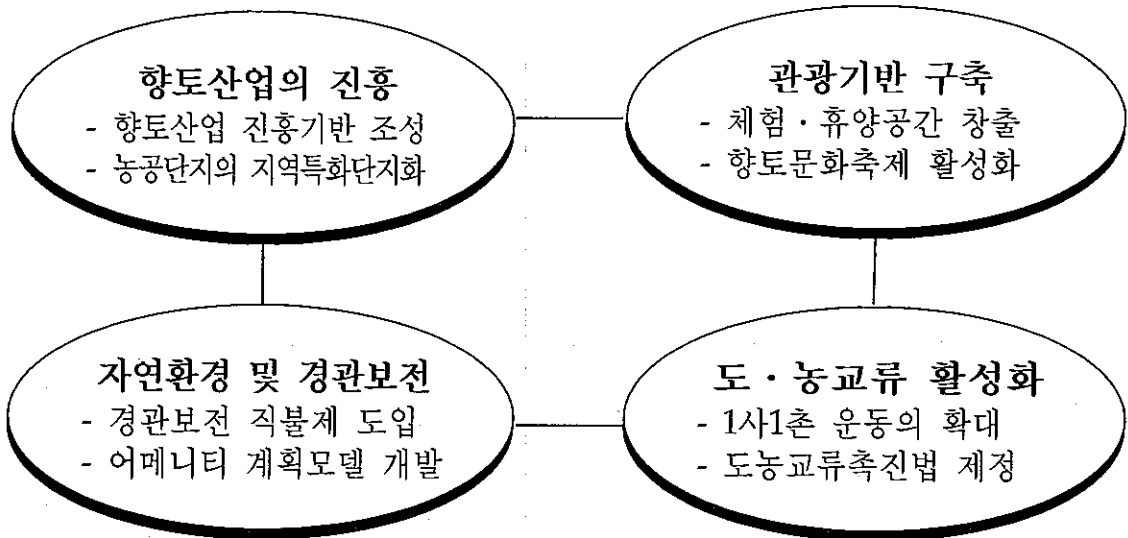
(8) 농산어촌의 정보화기반 확대

-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정보인프라 환경구축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대 구축
 - '05년까지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ADSL) 구축
 - '05년까지 농산어촌 가구(347만가구)의 97%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07년까지 도서·산간지역 가구에 대해 위성 인터넷서비스 보급
-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마을에 정보화마을 조성, 디지털사랑방 조성 등을 통해서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 추진
 - 정보화 마을 조성 : ('04) 261개소 → ('09) 781개소

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로 안정적인 농산어촌 생활 영위

* 2009년 농외소득 비중을 64% 이상으로 확대



< 로드맵 >

	1단계 (2005)	2단계 (2006~2008)	3단계 (2009)
향토산업의 진흥	○ 농공단지 314개소	○ 344개소 ○ 20개 시·군 향토 자원 DB화	○ 354개소 ○ 26개 시군으로 확대
농산어촌 관광기반 구축	○ 체험마을 237개 육성 (시·군당 1~2개)	○ 554개(시·군당 4개) ○ 테마공원 9개소 조성	○ 687개(시·군당 5개) ○ 테마공원 12개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 경관보전직불 470ha	○ 1,600ha	○ 2800ha
도농교류 활성화	○ 1사1촌 운동 자매 결연 3,000건	○ 5,000건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6,000건

가.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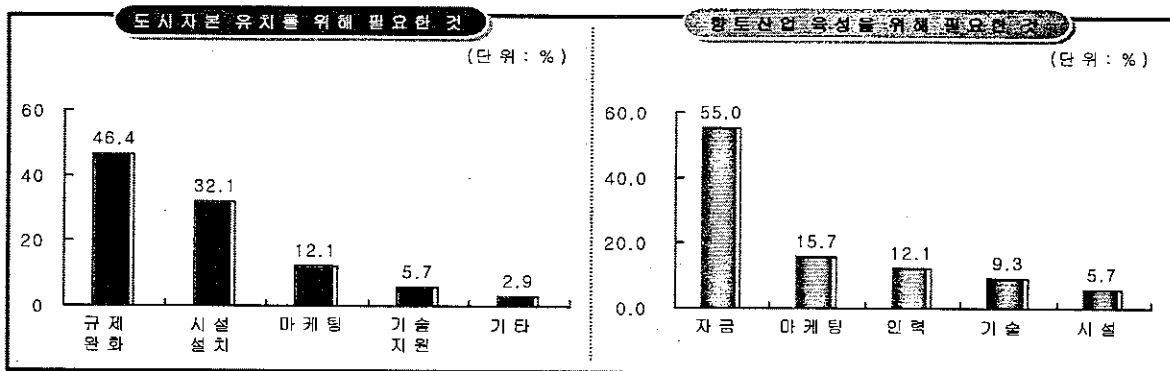
□ 주5일 근무제 확산, 도시민의 소득수준 증가 등을 활용하여 전통·고유 자원을 발굴·상품화하여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필요

○ 상품화 가능성이 있는 향토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미흡함

- 향토자원현황파악, 상품화, 업체에 대한 마케팅·컨설팅 지원 필요
-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의식 등이 부족함

○ 각 부처별로 특성에 맞추어 향토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1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음

< 도시자본 유치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04.11)

□ '02년부터 농산어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민의 관광수요에 비해 수용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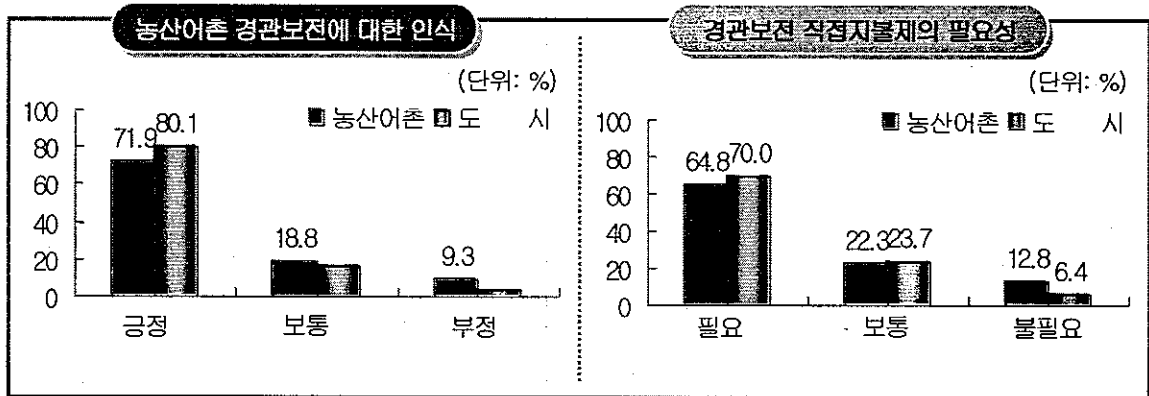
○ 민박농가의 숙박환경이 열악하고 체험시설, 특산품 등 농산어촌마을 자원의 관광상품화가 미흡하며 다양화되지 못하였음

○ '04년 까지 152개 체험·관광마을이 조성되었으나, 전체 농산어촌 마을 47천여개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임

□ 그동안 농산어촌개발이 중앙정부주도하에 SOC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별 어메니티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지 못하였음

- 전원·휴식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져 농산어촌 산재한 우수경관의 발굴하고 보전 및 활용 필요
- 농산어촌과 도시 모두 경관보전 직불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

< 농산어촌 경관보전 및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필요성 >



*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04.11)

□ 도·농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간 상생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강화할 필요

- '04년 하반기에 본격 시작된 1사1촌 운동은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였으나, 기업·단체가 마을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임
 - 기업·단체와 마을이 서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내실화 필요
- 최근 농촌관광, 1사1촌 자매결연, 농특산물 직거래 등 도농교류유형이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식품위생법 등에 도농교류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농촌숙박·인력육성·체험마을지원 분야는 미흡

나. 주요 추진과제

4-1. 향토산업의 진흥

◇ 지역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향토산업 육성을 통하여
농산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도모

(1) 향토산업 진흥기반 조성

- 여러 부처에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육성 지원업무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 특색이 있고 상품화가 가능한 향토자원의 일반현황과 연구진 및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표준화된 **향토자원 DB 구축**
 - 발굴된 향토자원의 가치나 효용 등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상품화 및 지적재산권 등록 등 권리화 사업 지원
 - 향토산업의 다양성과 발전단계에 따라 사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향토산업 발전 단계별로 지원 가능한 다양한 시책 메뉴를 제시하고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및 평가를 담당
 - **우수한 향토상품**에 대해 지리적표시제, 브랜드 개발 등 지원 추진
 -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등 3개 품목에 대해 실시중인 지리적 표시제를 '09년까지 13개 품목으로 확대
 - 지자체와 전문업체간 제휴로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 * 사례 : 함평 나비브랜드 "나르다", 충남 농산물 "으뜸Q" 등

(2)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특구 지정·육성 등

- 향토자원의 상품화, 경관의 자원화,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농산어촌 지역 등을 발굴하여 향토자원·경관특구로 지정·육성
 - 순창장류, 고창복분자, 고창 경관농업특구 등의 지정사례를 토대로 지자체 수요조사 실시 및 특구 요건 검토를 통한 특구지정 가능지역 파악
-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産·學·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향토산업의 혁신 주도

(3) 농공단지 확대·조성 및 향토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단지 육성

- 농공단지에 향토자원 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특화 단지로 지정·육성
 -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지역특화 업종 입주 유도
 -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지역특화 업종 유치로 농촌형 일자리 창출
- * 농공단지 조성 : ('05) 314개소(118천명 고용) → ('09) 354개소(133천명 고용)
- 농어업인들의 개업 또는 농한기 등에 농어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비용을 지원(5년간 65억원 투자)

(4) 향토전통음식·식문화의 세계화

- 한식문화의 국제화 : 한류(韓流) 문화흐름, 발효식품의 기능성 등을 활용한 한국형 전통식품의 세계화, 국제화(김치퓨전요리 개발 등)
-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 김치('01)에 이어 고추장, 된장, 간장, 인삼 등 우리 전통식품의 Codex 국제규격화를 통한 한국식품의 세계 식품화 추진

— < 전통음식의 세계화 사례 > —

- 김치류 : 98년 4,223만달러에서 2004년 10,300만달러 규모의 수출산업으로 성장
- 외식산업 : 1991년이후 한국음식이 건강식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불고기, 비빔밥 등의 외식업체가 일본, 미국 등에 진출

4-2. 농산어촌 체험·휴양기반 구축 및 활성화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소득 향상 추진

(1) 농산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 농산어촌체험, 친환경농업, 전통문화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육성
 - 시·군당 5~7개 조성, 1도1촌(선도마을)·1군1촌(우수마을)육성
 - * 농산어촌체험 마을수 : ('04) 152개 마을 → ('09) 687개 마을
- 산림교육문화센터, 등산학교 개설 등 산림휴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산악
자전거·승마 및 산림문화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산림 휴양 시설 확충
 - * 자연휴양림 : ('04) 94개소 → ('09) 154개소, 수목원 : ('04) 18개소 → ('09) 36개소
- 어촌의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하여 어항시설과 연계시킨 어촌관광
통합모델 개발·조성
 - * '09년까지 어촌·어항복합공간(7개소), 다기능어항(6개소), 어촌관광단지(11개소)조성
- 갯벌, 철새도래지, 습지 등을 활용한 자연친화 학습형 관광자원과
역사·문화, 레포츠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 지역자원과 개발테마를 고려하여 매년 대상지와 사업비를 25~30% 확대 추진
- 농업, 전통 및 특이자원, 특산품 등을 주제로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농촌테마공원을 조성, 관광 명소화하여 지역 활력 증진

- 공원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지원하고, 편의시설은 민자를 유치하여 조성('06년부터 매년 3개소씩, '09년까지 12개소 조성)
-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에 농업용수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민 여가 활동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수변개발 추진
- 기반시설은 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지원하고,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 수익시설은 민자유치를 통해 설치·운영('09년까지 8개소 추진)

(2) 도시민의 농산어촌 체험관광 수요 창출

- TV 및 인터넷 홍보,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 초청 농촌체험행사, 농촌마을 가꾸기경진대회, 녹색휴가캠페인, 그린맵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이벤트 개최
-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도시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농산어촌관광 박람회 개최
 - 우리 꽃 박람회 등 관련행사와 연계, 시너지효과 창출
 - * 제1회 농산어촌관광박람회 : '05. 4. 27~5.1, 무역전시장(SETEC)
- 방문객이 안심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보험 가입 확대 및 대국민 홍보
 - * 보험가입마을 : ('04) 10개 마을 → ('09) 300개 마을

- 농산어촌관광 포털사이트 개편, 농산어촌관광 해설사 도입 등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농산어촌 체험·휴양 안내 정보 제공

(3) 농산어촌 체험마을지원을 위한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도입

- 관계부처의 실무협의회 운영, 지자체 장이 주도하는 그린투어포럼 결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소비자가 참여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 평가시스템을 구축
-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와 연계한 사후관리, 농산어촌 체험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등급제 도입 등 지원체계 마련

(4) 향토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 지역의 고유한 향토자원과 문화를 연계한 지역별 대표축제 및 유망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농산어촌 관광과 연계체계 구축
 -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각 지역 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정부 지정 축제로 지원('04년 23개 축제 선정 및 14개 예비축제 지정 지원)
 - 아리랑TV 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와 한국관광공사 해외조직망을 통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을 지원

4-3. 농산어촌의 경관 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

◇ 농산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득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도입

-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직접 지불하는 경관보전
직접지불 시범사업 추진('05~'07)후 전국적으로 확대
 - 지자체와 지역주민간에 경관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이행결과를 평가
 - 경관보전직불 사업량: ('05) 470ha → ('09) 2800ha
 - * 경관작물 :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
하는 작물(예 :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 경관직불 대상을 다랭이논, 전통가옥 등으로 단계적 확대

(2) 경관지표 개발 및 어메니티자원도(Amenity Map) 구축하여 지역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산어촌지역의 유지·보전을 위해 읍·면단위로 경관을 조사하여
OECD 기준에 맞는 한국형 경관지표 개발
- 농산어촌지역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권역별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 경관지표를 활용한 경관지도 및 주민참여형 어메니티자원도 제작
(‘09까지 220개 읍면)

(3)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및 우수경관지역 발굴·홍보

- 지역별 특성을 살린 경관주택 발굴·보급을 위한 「농산어촌 경관
주택 Contest」 개최
- 「농산어촌마을경관 으뜸상」 제정 및 「어메니티 우수마을 100선」 발표
등을 통하여 마을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농촌가치 홍보

- 현재, 대부분 시멘트블록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산어촌주택담장을 자연친화적이고 주변경관에 어울리도록 복원 및 정비

(4) 지역별 고유경관 조성 및 생태숲 조성

- 우리꽃길 조성사업 대상지의 주요 도로변에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지역별 고유경관 조성('09년까지 355km)
- 산림생태계가 보전된 숲 조성 및 복원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자연학습 공간 제공
 - 지역, 기후, 생태천이 등을 고려한 생태숲 조성('09년까지 15개소)

(5)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자연경관, 전통주택 등 보전대상인 농촌경관을 유형화
- 경관협약제, 경관농업특구 지원, 경관보전을 위한 조치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 < 농산어촌 경관 보전 사례 > —

- 평창군의 경우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되는 농촌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99년부터 9월에 이효석 문화제 개최
 - 인공적으로 메밀밭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여 문학작품에서 기인된 메밀꽃으로 뒤덮인 농촌경관을 축제의 무대로 삼음
 - '04년 기준으로 전체면적 22ha(참여농가수 39농가)에 대하여 적기 파종 및 개화를 조건으로 ha당 450만원 지원
- 남해군은 남면 가천마을 다랭이논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04.12)
 - 100여층이 넘는 계단식 논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보전 및 활용가치가 높은 농촌문화경관을 형성
 - 다랭이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마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4-4. 도·농교류 활성화

◇ 농산어촌 체험관광, 향토산업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농교류촉진 및 도시자본의 농산어촌유입 활성화 추진

(1) 1社1村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내실화

- 1사1촌 운동의 내실화를 통해 범국민적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1사1촌 운동 시스템 구축
 - 정기적으로 1사1촌 운동 관련기관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운동추진 상황 점검, 제도개선사항 발굴·개선 추진
 - 1사1촌 운동 우수사례 홍보 및 부진사례 활성화 지도
- * 1사 1촌 자매결연실적: ('04) 2,404개 마을 → ('09) 6,000개 마을
- 1사1촌 운동 추진 매뉴얼을 개발하여 단계별 1사1촌 운동 활성화
 - 초기단계의 인적교류 중심에서 자본 등 물질 교류로 확대
 - 1사1촌 운동 신규 참여기업, 단체 확보를 위한 메뉴 개발
 - 기업 중심의 1사1촌운동을 1학교1촌, 1아파트1촌 등으로 확대하여 학생, 소비자 등 범국민적 참여를 확산

(2)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운동 추진

- 농산어촌주택 구입 및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홍보
 - 농산어촌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전원생활주택, 농어촌민박사업, 동호인 전원마을 조성자금 등 다양한 '전원생활자금대출' 상품 제공
 - * 도시의 거주 주택을 담보로 최고 1억원, 금리 4.5~7%, 최장 20년까지 지원
- 농산어촌지역의 경관에 어울리는 경관주택 설계도 개발·보급
 - * '04년까지 개발된 50종에 대한 리후렛 제작·배포 및 지속적 개발 추진

(3)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 「나의 농촌문화 답사기」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농교류체험기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여 농촌을 방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재학 중 최소한 1회 이상 참여토록 유도
- 초·중·고생 가족을 대상으로 대도시가정과 농촌가정간 친밀감 형성을 위한 도·농 생활체험캠프 운영
 - 방학기간의 방학과제인 현장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
- 대도시에 있는 향우회 등을 대상으로 고향찾기 캠페인 전개
- 도농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그린멤버십 카드를 발행하여 수요층(도시민 등)의 회원화 정책 전개
 - 포인트 적립 및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그린멤버십 활성화
- 농림어업인과 도시민간 이해증진과 교류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해 시행중인 농·소·정 협력사업 지원규모를 확대
-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을 정례화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및 홍보

(4)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하여 도농교류의 제도적 기반 구축

- 도농교류 유형별 개념 정의 및 활성화 지원방안의 근거 마련
- 지역주체역량 강화, 인증제도 등 신규정책 추진
-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박제도화 및 소규모 향토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대한 특례 마련

IV. 기본계획의 실행과 관리

1. 계획의 추진체계

- ◇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 ◇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은 자체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

□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계획 하에서 각 부처가 소관과제별로 농산어촌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

- 농림부에서 매년 당해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송부
- 각 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까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농림부)로 제출
- 농림부는 각 부처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 중앙과 지방간에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

- 시·도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고, 농림부로 제출
- 시·군은 시·도 계획에 의거 자체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로 제출
- 시·도는 시·군 단위의 계획을 종합하여 농림부로 제출

2. 계획의 평가체계

- ◇ 매년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연동 반영
- ◇ 투융자의 효율성과 기본계획 추진의 신뢰 제고를 위한 점검 평가 체계구축

□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연동 반영하는 체계 구축

- 분야별 관련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으로 외부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투자계획의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성과 등을 점검
 - '05년 상반기중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세부평가 방안 마련 추진
- 점검·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시·도 5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전담부서 지정 및 점검·평가단 구성 운영

- 기본계획 추진 과제는 시·도 내의 여러 부서 업무와 관련되므로 시·도에 계획 수립 추진 전담부서 지정 필요
 - 시·도 전담부서에서 시·군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원
- 시·도는 매년 시·도, 시·군 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평가
 - 점검·평가단은 외부전문가, 농림어업 유관기관·단체 등으로 구성
 - 시·도에서는 점검·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자체 계획을 보완

□ 119조 투융자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 선정, 집행 및 사후 평가 전단계를 체계화

- 신규사업 선정 : 전문가·농어업인 등의 의견수렴 및 시범사업 실시추진
- 사업집행 단계 : 일선 농어촌의 의견 수렴, 실태조사 실시
- 집행이후 단계 :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비효율적인 사업 폐지 등 투융자 방향을 조정

V. 투융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 투융자 계획

- 계획기간 중 총 투자 규모는 20조 2,731억원으로 연평균 15.8% 증가
 - 국비는 11조 5,527억원으로 총 투자 규모의 57.0%
 - 지방비는 8조 1,659억원으로 전체의 40.3%, 민자 등 기타는 5,545억원으로 2.7% 차지
 - 계획 기간 중 연평균 투자 규모는 4조 546억원으로 '04년의 2조 4,860억원 대비 1.6배 증가 수준
- 국비 11조 5,527억원의 연 평균 투자 규모는 2조 3,105억원으로 '04년 대비 1.5배 수준
 - 국비는 기 마련된 119조 투융자 재원 (7조 6,862억원, 67%), 각 부처 중기재정계획 재원 (3조 8,665억원, 33%) 범위내에서 충당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제1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						'05-'09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총투자소요	24,860	28,140	35,854	41,960	46,101	50,676	202,731	15.8
○국 비	14,895	15,101	18,981	23,938	27,117	30,390	115,527	19.1
-119조재원	5,767	8,778	12,361	15,958	18,304	21,461	76,862	25.0
-관련재원	9,128	6,323	6,620	7,980	8,813	8,929	38,665	9.0
○지방비	9,583	12,364	15,694	16,812	17,746	19,043	81,659	11.4
○기 타	382	675	1,179	1,210	1,238	1,243	5,545	16.5

□ 분야별 투융자 규모

- 부문별로는 복지 3조 4,226억원(16.9%), 교육 3조 1,473억원(15.5%), 지역개발 11조 2,480억원(55.5%), 복합산업 2조 4,552억원(12.1%)
- 교육(21.5%), 복지(20.5%) 분야는 전체 연평균 투자증가율(15.8%) 보다 높은 투자 수준을 유지
- 연평균 투자 규모는 4조 546억원으로 '04년 대비 1.6배 증가
 - 복지 : ('04) 3,098억원 → ('09) 8,753억원으로 2.8배 증가
 - 교육 : ('04) 2,149억원 → ('09) 7,362억원으로 3.4배 증가
 - 지역개발 : ('04) 1조 6,697억원 → ('09) 2조 8,670억원으로 1.7배 증가
 - 복합산업 : ('04) 2,916억원 → ('09년) 5,891억원으로 2배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제1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					'05-'09년 합계	'05-'09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투융자 합계	24,860	28,140	35,854	41,960	46,101	50,676	202,731	15.8
복지증진	3,098	4,151	6,535	7,123	7,664	8,753	34,226	20.5
교육여건개선	2,149	3,380	6,362	7,071	7,288	7,362	31,473	21.5
지역개발	16,697	16,884	18,895	22,579	25,452	28,670	112,480	14.2
복합산업	2,916	3,725	4,062	5,187	5,687	5,891	24,552	12.1

2. 재원조달 방안

□ 국비지원 계획과 국가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 강화

- 국비지원 재원은 119조 투융자계획 및 각 부처 일반회계 재원 등에서 마련,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계획 조정 및 신규투자 수요 반영 추진

- 농산어촌에 한정되거나, 농림어업인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융자계획에 중점 반영 추진

□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분권 교부세 등을 차질 없이 지원 추진

□ 다양한 민간자본 유치방안 도입 등을 통하여 사업재원 확보 및 사업조기달성 추진

- 사업특성에 따라 국고보조, 융자, 민자유치 등 재원조달방안을 다양화
-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종 시설 사업의 경우 공공시설의 민간자본 유치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추어 BTL방식 적극 활용

* BTL 방식 도입 가능 사업(예시)

- 농산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다목적교실 확충, 학교도서관,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농어촌 체육센터 건립, 산림박물관 건립, 수목원조성,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 참고1 > 제1차 기본계획 목표연도('09년)의 주요지표 변화

	과 제	주요지표	'04	'09
복지 기반	○ 건강·연금보험	○ 보험료 경감지원율	30%	50%
	○ 재해보상	○ 사망 공제금	1,000만원	6,000만원
	○ 의료 인프라	○ 보건소 등 신·개축	110개소	1,183개소
	○ 여성·복지	○ 여성농업인센터	27개소	163개소
	○ 노인복지	○ 재가노인복지센터	18개소	202개소
교육 여건	○ 교육의 질	○ 우수고등학교	7개교	88개교
		○ 특례입학비율	3%	4%
	○ 교육비 부담	○ 고교생 학자금 지원(연간)	87천명	77천명
		○ 대학생 학자금 지원(연간)	26천명	30천명
	○ 우수교원 확보	○ 교육감 교대 추천	877명	3,800명
지역 개발	○ 농산어촌 마을개발	○ 권역수	242권역	651권역
	○ 생활환경	○ 면상수도 보급률	33%	65%
	○ 인적자원개발	○ 리더육성	-	2,500명
복합 산업 육성	○ 도·농교류	○ 1사1촌 자매결연마을	2,404마을	6,000마을
	○ 농공단지	○ 단지수	309개소	354개소
	- 취업자	- 취업자수	113천명	133천명
	○ 농외소득	○ 비율	61%	64%

< 참고2 >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1.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과제	담당부처	비 고
1-1. 농산어촌 사회 안전망 확충	1-1-1.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농림부 복지부	
	1-1-2.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복지부	
	1-1-3.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농림부	
	1-1-4.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 지원	해수부	
	1-1-5.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복지부	
1-2. 농산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1-2-1. 농산어촌 보건 및 의료기반 확충 1-2-1-1.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1-2-1-2. 공공보건 기관 기반 확충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복지부	
	1-2-2.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농진청	
	1-2-3.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1-2-3-1.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환경개선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2-3-3. 안전영농구역(Safe Farm Zone)조성 지원사업	농진청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과제	담당부처	비 고
1-3. 농산어촌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 강화	1-3-1. 농산어촌 보육지원 강화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 지원	여성부 농림부	
	1-3-2.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농림부	
	1-3-3.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및 내실화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1-3-3-2. 사고농업인 영농지원	농림부	
	1-3-4. 농산어촌 여성 및 소외농가 이동봉사단 운영	농림부	
	1-3-5.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1-3-5-2.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1-3-5-4. 여성농업인 소규모 특화사업 지원	농진청 농림부	
1-4. 농산어촌 노인복지 증진	1-4-1. 농산어촌 노인복지 시설 확충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충 1-4-1-2. 농산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 설치·운영	복지부	
	1-4-2. 농산어촌 노인복지기반 구축 1-4-2-1. 노인보호 지원체계 구축·지원 1-4-2-2. 노인봉사원 양성·지원 1-4-2-3. 노인봉사원활동 프로그램 개발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1-4-2-5. 고령친화 농업모형 개발 및 시범단지 조성 1-4-2-6. 농산어촌 노인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농진청 농림부 농진청	
	1-4-3.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농림부	

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과제	담당부처	비 고
2-1.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2-1-1. 우수고교 집중 육성 및 대학특별전형 확대 2-1-1-1. 농산어촌 우수 고등학교 집중 육성 2-1-1-2.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확대(●) 2-1-1-3.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농진청	
	2-1-2.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2-1-2-1. 학교군 구성·운영 2-1-2-2.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2-1-2-3. 독자적인 작은학교 운영 2-1-2-4. 복식학급 편성기준 강화 2-1-2-5. 분교장 제도 개선 2-1-2-6.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2-1-2-7. 자율학교 운영 활성화 (●)	교육부	
	2-1-3. 농산어촌형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2-1-3-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2-1-3-3.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2-1-3-4.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2-1-3-5. 방학캠프 운영지원	교육부	
	2-1-4.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 강화 2-1-4-1.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2-1-4-2.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2-1-4-3.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교육부	
2-2.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 경감	2-2-1.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림부	
	2-2-2.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농림부	

● 는 비예산 사업임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과제	담당부처	비 고
2-2.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 경감	2-2-3. 농산어촌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2-2-3-2.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교육부 농림·해수부	
	2-2-4. 농산어촌 장애아 교육 지원 2-2-4-1. 농산어촌 지역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지원 2-2-4-2. 농산어촌 특수교육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교육부	
2-3.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2-3-1. 농산어촌 학교 교원 확보 2-3-1-1.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확대 2-3-1-2. 교원 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	교육부	
	2-3-2.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여건 개선 2-3-2-1. 농산어촌학교 교원 근무수당 신설 2-3-2-2. 교원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교육부	
	2-3-3. 농산어촌 학교 시설·설비·교구 등 지원 2-3-3-1. 다목적 교실 확충 및 시설 리모델링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지원	교육부	
	2-3-4.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교육부	
	2-3-5. 농산어촌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설치 (●)	교육부	
	2-3-6.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운영	농림부	

● 는 비예산 사업임

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과제	담당부처	비 고
3-1. 인적역량강화	3-1-1.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농림부	
3-2.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 개발	3-2-1. 배후마을 개발사업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3-2-2 중심지 개발사업 3-2-2-1. 소도읍 육성사업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행자부 농림부	
	3-3-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3-3-1-1. 농어촌주거환경개선(주택,마을하수도,빈집)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	농림부 행자부 농진청	
	3-3-2. 상·하수도 및 폐기물관리시설 확충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3-3-2-3. 면단위하수도 3-3-2-4. 소하천 정비 3-3-2-5.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환경부 농림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농림부	
	3-3-3. 농어촌 교통여건 개선 3-3-3-1. 농어촌도로 정비 3-3-3-2. 교통서비스 강화 3-3-3-3. 국고 여객선 건조	행자부 건교부 해수부	
3-3 기초생활 여건개선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과제	담당부처	비 고
	3-3-4. 면단위 소규모 기초생활환경 종합정비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	농림부	
	3-3-4-2. 오지개발촉진사업	행자부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	행자부	
	3-3-5. 과학·문화·예술·복지시설 확충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부	
	3-3-5-2.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부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문화부	
	3-3-5-4. 생활친화적 과학·문화공간 조성	문화부	
	3-3-5-5 지방문화프로그램운영	문화부	
	3-3-5-6.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과기부	
	3-3-5-7.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3-3-6. 농산어촌 정보화 기반확충		
	3-3-6-1. 정보화마을 조성	행자부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정통부	
	3-3-6-3. 정보화인프라 구축	농림부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해수부	
	3-3-7. 농어업인 정보활용도 제고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림부	
	3-3-7-2.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3-3-7-3. 농어업 관련정보 제공 확대		
	3-3-7-4. 사이버 영농기술 보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	농진청	
	3-3-7-5. 어업인 정보화교육	해수부	

◎ 는 비예산 사업임

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과제	담당부처	비 고
4-1. 향토산업의 진흥	4-1-1. 향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 구축 4-1-1-2.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농진청 농림부 행자부	
	4-1-2.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농림부 산자부	
	4-1-3.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4-2. 농산어촌 체험·휴양 기반구축및 활성화	4-2-1. 농산어촌 체험·관광·휴양기반 조성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4-2-1-5. 어촌관광활성화사업 4-2-1-6. 산림휴양공간조성 및 수목원 조성 4-2-1-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4-2-1-8.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4-2-1-9. 저수지 수변 개발	농림부 농진청 문화부 해수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부 농림부 농림부	
	4-2-2. 농산어촌 체험관광 수요 창출 4-2-2-1.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 4-2-2-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농림부 농림부	
	4-2-3.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 평가·관리체계 구축 (◎)	농림부	

◎ 는 비예산 사업임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과제	담당부처	비 고
4-2. 농산어촌 체험·휴양 기반구축및 활성화	4-2-4.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화부	
4-3.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	4-3-1. 경관보전직불제	농림부	
	4-3-2. 농산어촌 경관지표개발 및 경관보전방안 마련 4-3-2-1. 농촌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자원 관리기반 구축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농진청	
	4-3-3.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농림부	
	4-3-4.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산림청	
	4-3-5.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농림부	
	4-3-6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4-3-6-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도입 4-3-6-2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효율적 추진방안(●)	농림부 농촌진흥청	
4-4. 도·농교류 활성화	4-4-1. 1사1촌 운동 (●)	농림부	
	4-4-2.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활성화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농촌주택관련 금융 상품 개발)	농림부	
	4-4-3.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구축 4-4-3-1.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4-4-3-2. 도농교류센터 운영	농림부	
	4-4-4.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농림부	

● 는 비예산 사업임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문답자료

2005. 4.

농 립 부
농 촌 정 책 국

목 차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배경	1
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주요내용	3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과 농업·농촌 종합대책과의 관계	5
4. 기본계획의 투융자 재원 확보방안	7
5. 기본계획 추진 후 농촌 모습	8
6.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방안	9
7. 농산어촌의 부녀화가 진전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는데 따른 지원대책	11
8.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대책	12
9.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대책	14
10. 농산어촌 복합 산업 활성화대책	16
11.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금년에 당장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17
12. 15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세부과제들을 추진한다고 하는 데 제대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	18
13.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19
14. 제1차 삶의 질 향상위원회 (2.1)이후 보완된 내용은 무엇인가?	20

1.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배경

□ '92년이후 WTO출범 및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이 확충되고 농업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진전

- 진흥지역내 벼농사 기계화율 : ('92) 84% → ('03) 99%

- 3ha이상 농가 : ('92) 52천호, 13% → ('03) 83천호, 65%

□ 그러나,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
하였고 복지·교육·지역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 미흡
으로 농어촌 정주여건이 급격히 악화

○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이 정체되고 부채는 증가

- 농가부채/소득 : ('92) 6/15백만원 → ('03) 27/27백만원

- 농가/도시 소득비율 : ('92) 89.1% → ('00) 80.6 → ('03) 76.1

○ 교육·의료 등 열악한 농촌생활여건이 인구감소를 유발
하고, 인구감소는 교육·의료등 생활여건을 더욱 악화
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 농어가 인구 비중 : (90) 16.7% → (00) 9.2% → (04) 7.5%
- 농어촌 인구 비중 : (90) 25.6% → (00) 20.0%
- 만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율(04) : 농어가 28.6% > 도시 6.7%
- 의료기관의 도시집중 : 종합병원(93.6%), 병상수(89.5%), 의료인력(88%)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04) : 2,420개교 (전체 학교 5,149개의 47%)
- 도로 포장율(03) : 농산어촌 51.5% < 도시 89.5%
- 상수도 보급률(03) : 농산어촌 52.9% < 도시 98.0%

□ 농업과 달리 복지·교육 등 여러부처에 걸쳐 있는 농어촌 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특별법이 2004.6월부터 시행**

○ 동법에 의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2.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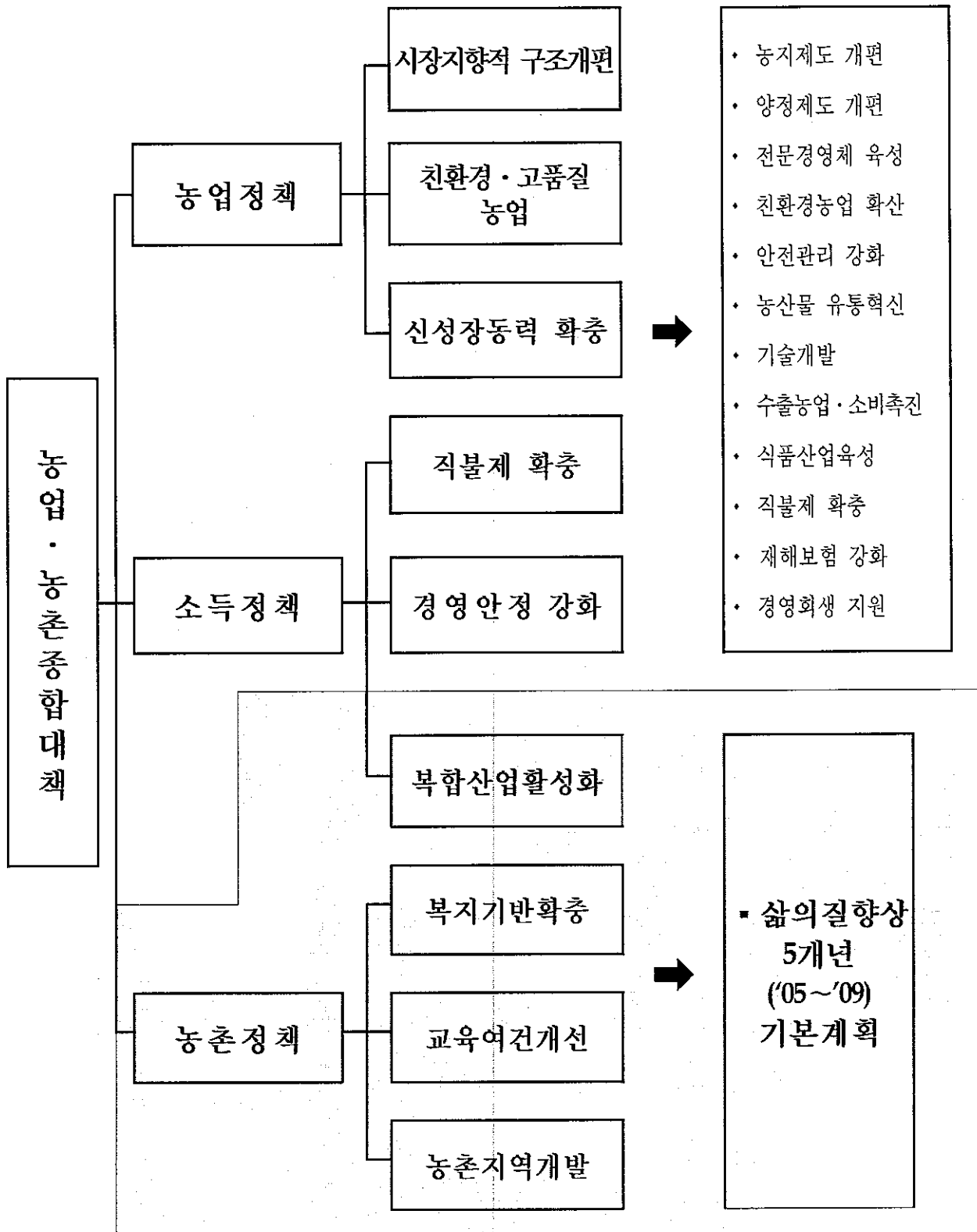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농어촌을 최소한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복합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교육개선·지역개발 및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보건소 신·개축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여성 및 노인복지 강화 등으로 농산어촌의 복지기반을 확충하고
 - 소규모 학교 활성화, 우수고교 육성 등 농산어촌 교육의 질적인 개선, 교육비 부담 경감, 교원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 주거생활편의, 농촌다움과 경관보전, 도시민의 여가수요, 농어촌 주민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읍·면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들을 체계적으로 종합개발
 - 농어촌 고유의 향토자원을 소득화, 체험관광 활성화, 도농교류촉진 등으로 농외소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복합산업을 활성화

- 정부는 이러한 5개년 기본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 119조 투융자계획 및 국가 중기재정계획 범위내에서 기본계획 기간동안 국비 11.6조원, 지방비 8.2조원 등 총 20.3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 매년 투융자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해서 투융자계획 조정 등 추진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과 농업·농촌종합대책과의 관계

-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중 농촌정책 분야 세부추진계획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업무를 다루는 주요 15개 부처가 참여하여 농어촌의 복지·교육·문화·지역개발 등 4대부문 14대 중점과제를 추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특별법에 따라 삶의질향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는 법정계획
- 또한, 삶의질향상 5개년기본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융자계획도 119조 투융자 계획 및 각 부처의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 수립
 - 기본계획 투융자 총 20.3조원중 국비 11.6조원은 119조 투융자 재원 7.7조원, 각 부처 중기재정계획 재원 3.9조원으로 구성

농업·농촌종합대책과의 관계



4. 기본계획의 투융자 재원 확보방안

- 기본계획상 투융자계획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19조 투융자계획 및 국가중기재정 계획 범위내에서 수립되었음
-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은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타당성 및 추진실적을 점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총 투융자 규모 : 20조 2,731억원
 - 재원별로 보면 국비 11조 5,527억원(57.0%), 지방비 8조 1,659억원(40.3%) 기타 5,545억원(2.7%)
 - 국비 11.6조원은 119조 투융자재원 7.7조원, 각 부처 중기재원 3.9조원으로 구성
 - 부문별로는 복지 3조 4,226억원(16.9%), 교육 3조 1,473억원(15.5%), 지역개발 11조 2,480억원(55.5%), 복합산업 2조 4,552억원(12.1%)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부문별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제1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 계획					'05-'09년 합계	'05-'09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총투자소요	24,860	28,140	35,854	41,960	46,101	50,676	202,731	15.8
복지증진	3,098	4,151	6,535	7,123	7,664	8,753	34,226	20.5
교육여건개선	2,149	3,380	6,362	7,071	7,288	7,362	31,473	21.5
지역개발	16,697	16,884	18,895	22,579	25,452	28,670	112,480	14.2
복합산업	2,916	3,725	4,062	5,187	5,687	5,891	24,552	12.1

5. 기본계획 추진 후 농어촌의 모습

□ 삶의질향상 기본계획의 추진을 통해

- 농어촌은 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

□ 우선 제1차 5개년 계획기간('05~'09)동안 복지지원 강화 및 교육, 지역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 제2차 계획기간('10~'14)동안 적극적인 도시 인구 유입 등으로 최소한 전국민의 20%가 농촌에 살수 있도록 하겠음

* 현 감소추세 유지시 농촌인구비중 : ('00)19.9% → ('08)18% → ('13)17.2%

* 제1차 기본계획 목표연도('09년)의 주요지표 변화

구분	과 제	주 요 지 표	'04	'09
복지 기반	○ 국민건강보험 ○ 연금보험 ○ 여성복지 ○ 노인복지	○ 보험료 경감지원을 ○ 보험료경감 지원 ○ 여성농업인센타 설치 ○ 재가노인복지센터	30% 152천 원 27개소 18개소	50% 394천 원 163개소 202개소
교육 여건	○ 교육의 질 ○ 교원 확보	○ 우수고등학교 ○ 대입 특례입학비율 ○ 교육감 교대 추천	7개교 3% 877명	88개교 4% 3,800명
지역 개발	○ 농산어촌 마을개발 ○ 생활환경 ○ 문화시설	○ 권역수 ○ 면상수도 보급률 ○ 공공도서관	242권역 33% 71개소	651권역 65% 112개소
복합 산업성 육성	○ 농공단지 - 취업자 ○ 농외소득 ○ 도·농교류	○ 단지수 - 취업자수 ○ 비율 ○ 1사1촌 자매결연 실적	309개소 113천명 61% 2,404건	354개소 133천명 64% 6,000건

6.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방안

□ 우선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 농림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경감율: ('04) 30%→('06) 50%

* 가구당 건강보험료 지원: ('04) 210천원 →('06) 404천원

- 연금보험 지원 표준소득: ('04) 12등급(440천원)→('09) 18등급(730천원)

* 1인당 연간 연금보험지원: ('04) 99천원~152→('09) 119천원~394

○ 농산어촌의 낙후된 보건·인프라 확충

- 노후 보건소 등 시설 현대화: ('04까지) 1170개소 →('09)2,243개소

* 농산어촌 보건소('04): 3,316개소(보건소 146, 보건지소 1,271, 보건진료소 1,899)

- 농산어촌 소재 24개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장비현대화

- 응급인프라가 취약한 28개 군지역의 응급인프라 확충

○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재배·과수·축산 등 농업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안전영농구역”을 조성

* 안전영농구역 조성: ('06) 20개 권역→('09)165개 권역

○ 농림어업인들의 농작업 피로회복을 위해 농산어촌에 건강관리실을 확대 조성

* 건강관리실 설치:('04까지) 884개소 →('09까지) 1,436개소

○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도 크게 강화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

*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04까지)222개소 →('09까지)722개소

- 아울러, '05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지원을 확대

* 영유아양육비 지원: ('04) 1.5ha미만(25천명) → ('05) 2.0ha(31천명)

□ 농산어촌의 고령화에 대처하여 농산어촌 노인과 도시 고령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노인대책 등도 마련

- 우선,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농산어촌 마을공동체 중심의 노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06년에 40개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09년까지 200개 마을로 확대하고,

-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 또는 병든 노인들을 위해 현재 18개소인 재가노인복지센터를 '09년까지 202개소로 확대

- 농산어촌의 고령노인들이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09년까지 800개 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하고

- 주거·의료·여가시설이 복합된 복합노인복지단지를 '05년중에 4개소 설치하고 영농과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전원형 은퇴농장을 확대 설치하여 도시은퇴 고령자의 농산어촌거주를 유도할 계획

7. 농산어촌의 부녀화가 진전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는데 따른 지원대책

-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을 크게 강화할 계획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
 - '05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지원을 확대
 - 현재 27개소인 여성농업인센터를 시·군당 1개소씩 '09년까지 163개소를 설치
 - 출산에 한정된 농가도우미 제도를 사고·질병·교육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아울러 농한기 등에 농산어촌 여성들의 솜씨 등을 활용한 소득 기반을 확충 할 수 있도록 된장 등 전통 식품 가공 창업 지원을 확대
 - 농산어촌 여성 창업 박람회 개최,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하여 정보교류 및 소비자 구매 파악도 활성화

8.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대책

-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먼저,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단계별 교육서비스 강화로 교육기회를 제고
 -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시설 등을 공동운영하거나,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등으로 상치교사 문제 해소 및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
 - 우수교(총 88개교)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06학년부터 4%로 확대
 - 대입특례입학 혜택 학생수:('04)10,442명→('06)13,320명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458명) 및 문화·예술관련 강사풀제 활용 등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의 특기·적성 교육도 대폭 강화하고 면지역 초등학교의 도시문화 체험 방학캠프로 적극 지원할 계획
-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경감
 - 농림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대상을 1.5ha미만 농가로 제한 하던 것을 '05년부터 전 농림어업인 자녀로 확대
 -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의 무이자 학자금 융자도 지속 추진

□ 농산어촌학교에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근무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현재 4개도에서 시행중인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
신·편입 제도를 7개도로 확대하고, 신·편입생
3,80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지원하여 초등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 순회·복식수업 수당 신설, 도서·벽지 등 오지학교
사택확충 및 유능한 교장 초빙, 희망교원의 정기근무
허용 등을 통해 농산어촌 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해
나갈 계획

9.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대책

-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기능과 역할에 맞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면소재지 및 소도읍에 면체육공원, 건강관리실, 종합복지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행정시설을 집중배치하고, 농산어촌 마을들을 체계적으로 연계·개발
 - 농산어촌 마을들은 인구유지가 가능한 소득·자원 권역 특성을 고려 '04년 현재 242개 권역에서 '09년까지 651개 권역으로 확대 개발
 -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참여형 지역개발사업, 도시민의 농산어촌 정주수요에 맞춘 20~50호 규모의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 은퇴자를 위한 은퇴농장 조성 등을 지원
- 또한,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산어촌 주택 신·개축 융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행 33%에서 '09년까지 65%로 확충하며, 폐기물 처리시설도 '04년 109개소에서 '09년 140개소로 확대할 계획

-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 41개관을 추가 건립하고, 농산어촌 체육문화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산림박물관 등 다양한 체육·문화공간도 조성할 계획
 - 한편, 농산어촌의 이장, 주민, 공무원 등이 자გი지역의 자원을 발굴·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인적역량을 강화**할 계획
 - 마을 주민, 리더, 부녀자, 공무원 등 지역의 인적자원 유형별로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
 - 농산어촌지역개발 인재뱅크 구축·운영, 농산어촌 **지역개발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통해 농산어촌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의 인적역량 보완을 지원
 - 아울러, BTL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개발에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등 민간의 경영·인력 참여를 촉진
 - 노후하수관 정비, 공공임대주택, 체육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등 다양한 지역개발 관련 공공시설들에 적용 가능
- * BTL(Build-Transfer-Lease)사업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10.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대책

- ☐ 우선, 농산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향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
 - 농공단지를 '04년현재 309개소에서 '09년까지 354개소로 확대하고 향토자원 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특화단지로 지정·육성하여 2만명의 고용을 추가 창출해 나가고,
 - 향토자원의 **DB구축**, 향토자원 지역공동브랜드화, 지적재산권 등록 등 향토산업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체험마을 확대와 별도로 규모가 큰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및 저수지 수변개발을 실시
 - 농업, 전통, 특이자원, 특산품 등을 주제로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할 계획
 -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에 레저·숙박 등 국민여가 활동이 가능한 도·농교류의 기반시설을 개발
- ☐ 도시민이 안심하고 농촌 체험마을을 찾도록 **체험마을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농산어촌관광박람회**도 매년 개최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재학중 최소 1회이상 참여** 유도
 -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지자체장 주도 그린투어포럼 결성 등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와 연계한 사후관리, 체험마을 시설·프로그램 인증제·등급제 도입 추진
- ☐ 도·농교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을 추진

11. 기본계획 시행으로 금년도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

□ 농산어촌 복지분야

- 건강 보험료 경감율: ('04) 30%→('05) 40%
 - 농어가 가구당 년 평균 지원금액: ('04) 210천원→('05) 294천원(84천원 증)
-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년간 최대): ('04) 152천원→('05)224
- 건강관리실 및 국공립 보육시설 100개 추가 설치
- 영유아 양육비 지원: ('04)1.5ha 미만 농어가(25천명)→ 2ha 미만 농어가(31천명)
 - 가구당 양육비 지원금액(년간):('04) 1,224천원 → ('05) 1,440천원
-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 복지센터 56개소 신설

□ 농산어촌 교육분야

-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6개 학교 군을 만들고, 우수 고교도 7개교를 육성하고
- 고교생 학자금지원 대상이 전 농어가로 확대(87천 → 107천)
-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

- 주택 신·개축 융자금액(2→3천만원) 및 금리(5.5%→3.9%) 조정, 상·하수도 보급확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기초생활여건 개선
- 경관보전 직불제 470ha 시범 실시(ha당 1.7백만원 지급)
- 1사1촌 운동이 내실화되고 도농교류도 실질화

12. 15개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세부과제들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지 ?

-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사업 폐지, 신규사업 반영 등 투융자계획 조정을 추진
 - 이를 위해 금년도 중앙 및 지방단위에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으로 외부 평가단을 구성하고,
 - 119조 투융자 평가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구체적인 점검·평가 시스템 구축 계획

13.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 기본계획에 따라 2005년도 시행계획 수립(5월)

- 농림부에서 각 부처로 시행계획수립지침 배포
- 각 부처는 소관 과제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로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위원장 농림부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

☐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별 5개년계획 수립(7월)

-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5개년 계획을 수립
- 시·군은 시·도 5개년 계획하에서 시·군 5개년 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점검·평가 체계 구축(9월)

- 중앙 및 시·도 단위에 농어업인 대표,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기본계획 점검·평가단을 구성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평가방안 마련

14. 제1차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2.1)이후 보완된 내용은 무엇인가?

- 지난 2.1일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이후 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2.22) 및 두 차례의 경제정책조정회의(2.25, 4.1)를 거쳐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보완하고
 - 삶의질향상 위원회 심의(4. 16)를 거쳐 최종 확정
- 기본계획의 주요 보완내용은
 - 농산어촌의 현황과 그동안의 농산어촌 정책 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을 명확하게 제시
 - 동 기본계획이 10년 계획인 「농업·농촌종합대책」 중 5년 단위의 농촌분야 계획임과 함께 장기비전을 명확화
 - 농어촌을 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도·농 상생의 복합정주 공간으로 조성 추진

○ 기본계획의 부문별·재원별로 투융자 계획을 구체화

- 총 투융자 규모 : 20조 2,731억원

· 재원별 구성: 국비 11조 5,527억원(57.0%), 지방비 8조 1,659억원(40.3%) 기타 5,545억원(2.7%)

· 국비 11.6조원: 119조 투융자재원 7.7조원, 각 부처 중기재원 3.9조원으로 구성

· 부문별 구성: 복지 3조 4,226억원(16.9%), 교육 3조 1,473억원(15.5%), 지역개발 11조 2,480억원(55.5%), 복합산업 2조 4,552억원(12.1%)

○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를 보완

- 전문가, 농어업인 단체 등으로 중앙 및 시도단위로 평가단을 구성

- 매년 체계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연동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안 마련